

통일 비용 · 편익 종합연구 2012-2

#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김규륜 · 조한범 · 이동휘 · 임수호 · 장형수 · 정영철 · 조성렬 · 황규성

#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김규륜 · 조한범 · 이동휘 · 임수호 · 장형수 · 정영철 · 조성렬 · 황규성

##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

인 쇄 2012년 12월

발 행 2012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국제관계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전 화 02-901-2527

팩 스 02-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I S B N 978-89-8479-700-0 93340

가 격 9,000원

© 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요약 .....	vii
Abstract .....	xxiii
<b>I. 서론 .....</b>	<b>1</b>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2
가. 연구의 목적 .....	2
나. 연구의 방법 .....	3
2. 연구의 대상시기 .....	5
3. 연구의 대상분야 .....	7
<b>II. 통일유형 .....</b>	<b>11</b>
1. 유형 I : 균등형 .....	13
2. 유형 II : 급변형 .....	14
3. 유형 III : 선도형 .....	14
4. 유형 IV : 흡수형 .....	15
<b>III. 선도형 통일의 개념과 구조 .....</b>	<b>19</b>
1. 선도형 통일 개념도 .....	20
2. 선도형 통일 진입조건 .....	23
3. 선도형 통일 경로 .....	24
<b>IV. 선도형 통일 영향요인 .....</b>	<b>29</b>
1. 한국상황 .....	30
2. 북한상황 .....	31
가. 북한사회의 인식 .....	31
나. 북한정권의 생존능력 .....	32
다. 정권변화 이후 정부 .....	33
라. 남한의존형 개혁개방 .....	34
마.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 .....	35
바. 북핵문제 .....	35
3. 국제환경 .....	36
가. 동북아시아 동맹관계 .....	36
나. 중국의 경제상황 .....	36
다. 국제기구의 개입가능성 .....	37

# CONTENTS

<b>V. 선도형 통일의 단계별 정책과제</b> .....	<b>39</b>
1. 분단해소단계 .....	40
가. 정치분야 .....	40
나. 경제분야 .....	51
다. 사회분야 .....	54
라. 종합적 기대상황 .....	57
2. 체제통합단계 .....	59
가. 정치분야 .....	59
나. 경제분야 .....	65
다. 사회분야 .....	71
라. 종합적 기대상황 .....	75
3. 국가완성단계 .....	76
가. 정치분야 .....	76
나. 경제분야 .....	81
다. 사회분야 .....	84
라. 종합적 기대상황 .....	86
<b>VI. 정책제안 및 고려사항</b> .....	<b>89</b>
1. 정책제안 .....	90
가. 선도형 통일 추진 원칙 마련 .....	90
나. 선도형 통일에 대한 남한 사회의 국민합의 조성 .....	90
다. 선도형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	91
라. 북한의 정상국가 변화유도 .....	92
2. 고려사항 .....	92
<b>부록: 독일통일 사례</b> .....	<b>95</b>
I. 총론 .....	96
II. 통일 준비시기(1989 여름~1989.12) .....	96
III. 분단해소단계(1989.12~1990.10.3) .....	102
IV. 체제통합단계(1990.10.3~1995) .....	109
V. 국가완성단계(1996~2005) .....	117
VI. 정상국가 운영시기(2005~) .....	122
VII. 독일통일 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함의 .....	126
VIII. 부표: 통일 이후 주요 지표 .....	129

##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 요약



##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그 동안 국제 및 국내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함.
- 한반도 주변정세 및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초당적 대북정책의 도출을 위해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
- 한반도 통일에 대한 경로와 방식의 국내외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에 근거한 통일과정의 식별과 단계별 정책과제의 제시 및 효과적 수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연구진이 순차적으로 사안별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개최하여 점증적으로 내용을 축적해 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
- 주제의 식별과 관련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 완성이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분단되기 이전으로 회귀하는 과거지향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통일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미래지향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간주
- 통일의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위성(Desir-



ability), 실현성(Feasibility), 발생가능성(Probability)의 3가지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

-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로를 선정하여 집중 연구

○ 통일의 단계를 ①분단해소단계, ②체제통합단계, ③국가완성단계 3단계로 설정하여 시간적 체계성을 확립

- 선행 단계 과제와 이후 단계 과제 간 정합성 확보에 주력

○ 통일의 분야는 사회과학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①정치분야, ②경제분야, ③사회분야의 3분야로 구분하여 단계별 과제를 제시

- 분야별 과제가 상호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

○ 3단계·3분야에 대해서 제시된 통일과제를 수행정도에 따라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종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제시된 과제를 재점검하여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함.

- 분단해소단계에서는 정치영역, 체제통합단계에서는 경제영역, 국가 완성단계에서는 사회영역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요주체를 남한, 북한 그리고 국제적 행위자 등 3대 대상으로 파악하여 분석

- 한반도의 분단이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적 행위자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주요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파악이 긴요함.

## 2 통일유형 구분

- 한반도 통일의 유형을 통일과정의 진전속도에 따라 점진형과 급진형으로 구분
  - 점진형은 단계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이며, 급진형은 어느 한쪽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됨에 따라 통일 과정이 단기간에 진행되는 경우임.
  
- 통일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에 따라 대칭형과 비대칭형로 구분
  - 대칭형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과정에서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이며, 비대칭형은 남한과 북한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상대적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임.
  
- 통일의 진전속도와 수행역할 비중에 따라 통일유형을 ①균등형(점진-대칭), ②급변형(급진-대칭), ③선도형(점진-비대칭), ④흡수형(급진-비대칭) 4가지로 구분
  - 점진형은 북한의 내부개혁이 성공하여 남북한 통일협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로 상정하였으며, 급진형은 북한 사회의 예상치 못한 내부변동으로 인해 남북한 통일협상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상정함.
  - 대칭형은 남북관계의 대칭성에 따라 동등한 관계로 남북협상이 진행되고 그 결과 통일과정으로 진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비대칭형은 남북관계의 비대칭성에 따라 한 쪽으로 치우친 통일과정으로의 진입을 말함.



-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4가지 통일유형에 대해서 당위성(Desirability), 실현성(Feasibility), 발생가능성(Probability) 등의 3대 기준에 따라 가장 현실가능한 통일 유형 선정
  - 선도형 통일(유형Ⅲ: 점진-비대칭)을 현실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높은 통일유형으로 선정함.
  
- 선도형(점진-비대칭)은 북한 개혁에 따라 점진적 통일과정이 진행되고, 북한 주민이 남한사회를 대안으로 인식하며 남북합의에 의한 비대칭적 통일협상이 진행되는 가장 현실가능한 통일유형
  
- 선도형 통일에서는 남한의존형 경제개혁과 통일지향이 북한 주민들에게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남한이 북한 주민들에게 대안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
  - 통일과정이 남북 합의로 시작되는 선도형 통일유형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선도형 통일유형에서는 북한 주민이 남한사회를 대안으로 보는 체제 전환적 관념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
  -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위기에 대한 다양한 대응과정에서 체제전환으로 수렴된 역사적 사례를 볼 때 현실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선도형 통일은 북한이 남한의존형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상정
  - 북한의 근본적인 경제개혁에 대한 물질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남한이며 역사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경제지원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는 회의적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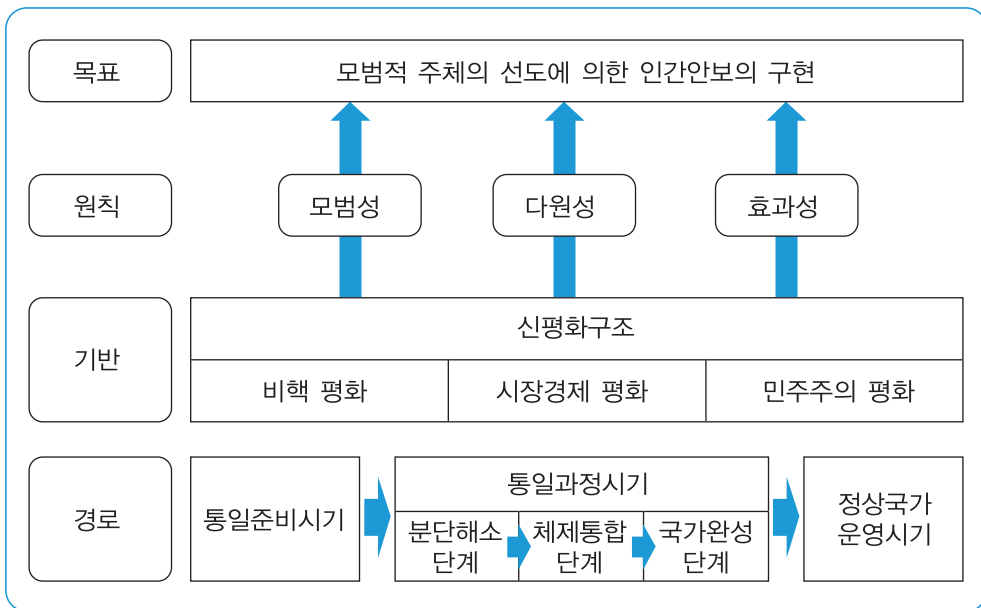
-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점진적으로 시도하여 성공하길 바라지만 북한은 일시적인 대량의 경제지원을 바탕으로 경제개혁을 원한다는 점에서 남한의존형 경제개혁으로 귀결될 것으로 상정함.

### 3 / 선도형 통일의 개념과 구조

#### 가. 선도형 통일 개념도

- 선도형 통일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올바른 선도(善導)와 이끄는 선도(先導)의 의미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며, 아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추진목표, ②추진원칙, ③추진기반, ④추진경로의 4대 요소를 포함

〈그림〉 선도형 통일 개념도





- 선도형 통일의 추진목표는 인류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간안보의 궁극적 구현으로 모범주체에 의해서 선도
  - 인간안보는 21세기 국제관계에서 가장 발전된 개념으로 인식
  - 인간안보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충족
  - 강대국의 지배가 아닌 중견국가와 약소국의 동시 참여를 보장
  - 군사적 차원인 전통적 의미의 안보에 더해서 환경, 보건 등 비전통적 안보 요인을 포괄
  
- 선도형 통일의 추진원칙은 ①모범성, ②다원성, ③효과성의 3대 요소를 지향
  - 모범성은 분단이전 상태로의 회귀인 과거지향적 통일이 아닌 미래지향적 통일정책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통일국가 형성을 의미
  - 다원성은 통일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의 양대 주체 정부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동시에 상호이해에 따른 협력의 추진을 의미
  - 효과성은 통일과제의 단계별 추진을 통해 성과가 축적되어 진행되는 점증적 방식과 통일과제의 수행에 의한 역효과를 사전에 파악하여 역류현상을 방지하는 것을 모두 포함
  
- 선도형 통일의 추진을 위한 기본전제는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통일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①비핵평화(Nuclear-Free Peace), ②시장경제평화(Market-Economy Peace), ③민주주의 평화(Democratic Peace)의 3대 요소를 포괄하는 종합적 사고에 입각한 한반도의 신평화구조에 기반

- 비핵평화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평화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서 현 시점에서부터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에도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
- 시장경제평화는 자본주의평화라고도 하며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국가의 발전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역사적 경험에 근거
- 민주주의평화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 간에는 군사적 수단에 의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갈등해소가 선호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함.

- 선도형 통일의 범위는 현재부터 통일국가가 완성된 이후 시점까지를 통시적으로 접근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통일의 전 과정을 제시
  - 통일의 전 과정을 통일준비시기, 통일과정시기, 정상국가운영시기로 구분
  - 통일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통일과정시기를 분단해소단계, 체제통합단계, 국가완성단계의 3대 단계로 구분

## 나. 선도형 통일 진입조건

- 선도형 통일경로 진입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 북한상황의 변화와 국제환경 조성의 필요조건과 남한의 의지와 능력인 충분조건 필요
  - 필요조건은 북한 주민이 통일을 원하고 개혁통일지향의 북한정권이 등장하며 국제적으로 통일에 우호적 환경 조성임.



- 충분조건은 남한이 통일에 대한 의지결집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남북한 경제교류 확대,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남북한 정치협상을 실시해야 함.
- 선도형 통일의 진입을 위해 미국, 중국의 강대국과 UN 등의 국제기구가 한반도 통일과정에 반대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남북한 합의에 의한 선도적 통일이 추진가능한 우호적 환경 조성 필요

### 다. 선도형 통일 경로

- 북한정권의 리더십 약화에 따른 선도형 통일의 진입 상황 발생
  - 외부 정보유입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 경제붕쇄 및 중국경제의 재조정기에 따른 북한 경제위기의 심화, 북한 엘리트 세력 간의 노선과 정책의 충돌에 따른 권력조정의 실패 등의 각종 요인에 의해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 약화가 발생함.
  - 리더십의 약화는 지배연합 분열과 권력 분산, 급변상황인 내란과 정권붕괴 등의 결과를 초래함.
  - 선도형 통일 경로에서는 중앙권력 리더십 약화에 따라 아래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개혁 및 통일 지향적 요구를 받아들여 개혁정부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복합적인 정치·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선도형 통일을 3단계 진입과정으로 구분
  - 1단계는 북한 주민의 인식변화, 정치적 균열, 경제위기 등의 복합적



상황으로 인한 김정은 정권 리더십 약화

- 2단계는 김정은 정권 리더십 약화에 따른 권력 분산과 정권의 생존능력 한계에 따라 짧은 기간에 다수 정권의 등장과 소멸이 반복된 후 북한 주민의 요구에 의한 북한 개혁정부 등장
- 3단계는 개혁정부가 북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시도하지만, 실제로 내부자원의 한계에 의해서 개혁프로그램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거나 실행되지 못함.
- 개혁프로그램을 위해 남한으로부터 가용 자원 도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북한 주민의 사회적 요구에 따른 통일지향정부의 등장으로 선도형 통일과정으로 진입함.

## 4 / 정책제안 및 고려사항

### 가. 정책제안

#### 〈선도형 통일 추진 원칙 마련〉

- 선도형 통일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주안점을 ①포괄성, ②연계성, ③점증성의 3대 원칙 하에 추진 방향 설정 필요
- 첫째, 한반도 통일의 문제는 한민족의 삶의 터전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대변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계획의 포괄성이 담보되어야 함.



- 둘째, 정치·경제·사회분야별 과제의 실천과 함께 수행과정에서 정책과 제 간 파급효과에 따른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셋째, 통일정책 추진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관성 결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한 정책의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점증적 방식이 정착되어야 함.

### 〈선도형 통일에 대한 남한 사회의 국민합의 조성〉

- 선도형 통일은 남한 주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 하에 마련된 것이므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정책 발굴 필요
  - 통일에 대한 전국민적 합의를 위해 남한 국민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우선적으로 불식시켜야 함.
- 남한사회의 통일에 대한 부담감은 과도하게 인식되고 있는 통일비용과 연관되어 있기에, 선도형 통일에서는 통일비용이 남한의 경제력을 초과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홍보할 필요
  - 통일비용은 남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지출되어야 하며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과도한 재정소요는 통일과정의 소요 시간을 늘리는 정책적 방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함.

### 〈선도형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 한반도 통일이 모범적 국가건설의 연장선에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
  -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 정착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사실상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통일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모범적 발전상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을 홍보해야 함.
  - 통일한국이 역내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주변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선도형 통일과정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해 한국 공공외교의 확대 필요
  - 한국의 격상된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국에 대한 통일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북한의 정상국가 변화유도〉

- 북한을 정상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난 해소와 독재정권 타파 필요
  -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함.
  - 북한 독재정권을 민주국가 운영 형태로 전환·유도하여 동북아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는 호전적 인상을 해소시켜야 함.



- 북한이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남한 및 국제사회의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나. 고려사항

- 선도형 통일에서는 지향해야 하는 사안과 지양해야 하는 사안을 고려하여 통일정책을 마련해야 함.
- 통일정책의 추진관련 지향해야 하는 것은 ①국가역량 강화, ②국민합의 도출, ③종합적 추진체계 마련의 3대 방식임.
  - 통일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국가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역량강화는 통일과제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됨.
  - 국민합의 도출은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의 과제가 전 국민의 합의를 통해 수행될 때 효과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통일은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전 국민의 노력이 결집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거버넌스 개념에 입각한 종합적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
- 통일정책의 추진관련 지양해야 하는 것은 ①당위성 통일 강조, ②불필요한 북한 자극, ③과도한 자신감 표출의 3대 방식임.
  - 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당위성에 기반한 통일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통일이 국가발전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북한에 원칙적 통일정책을 추진하되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바, 통일한국의 위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홍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사안이며 주변국에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 Abstract



# GUIDING TYPE OF UNIFICATION : THE ROUTE AND TASKS

<Abstract>

I

## THE PURPOSE OF RESEARCH AND METHODOLOGY

- This study aims to seek a rational and future-oriented policy solution for Korean unification on the basis of positive facets, which has long been excessively emphasized on the negative-side only within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In order to draw a feasible unification policy, this study takes active measures to respond to the volatile situation of North Korea and the dynamic East Asian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bipartisan support based on domestic consensus is needed in order to construct an objective and realistic unification policy alternative.
- Under this purpose, experts from each field of study who have long been engaged in unification study are collected. During the expert panel's several brainstorming sessions, various subjects are given by areas and stages and all ideas has consecutively been accumulated.



- The most important orient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unification is considered as the birth of a new unified Korea rather than a return back to the past, which is before the division had occurred.
- This study examines the unification paths with three principles: Desirability, Feasibility and Probability, knowing that there could be various paths to achieve unification. Among the paths, the most probable route is chosen and analyzed intensively.
- Considering that unification have periodical attributes, this study divides the unification process period into three stages: ① Division Dissolving, ② System Integration, and ③ Nation Building stage. Among a large set of tasks according to the three stages, this study carefully ensures the consistency of each task between the stages.
- Compared to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lso includes political and social areas as well as the economic area into the findings. By doing so, tasks from each stage and field can be suggested in greater detail. This study carefully classifies the specific tasks for each area, while avoiding any overlaps, which then can be linked and presented accordingly.
- By examining the expected outcomes of the tasks suggested through three-stage and three-area analysis, this study tries to provide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It is expected

that political tasks would play a central role in the Division Dissolving stage. Economic tasks would be highlighted during the System Integration stage and social tasks for the Nation Building stage.

- This study groups and analyzes the three main players of the Korean unification process: ① South Korea, ② North Korea and ③ other international actors. Given that the division has been imposed by external powers according to their convenience and international turmoil, the role of third parties can not be ignored. The influence of dominant international super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hould be analyzed more thoroughly.

## II / VARIOUS TYPES OF UNIFICATION

- This study classifies each type of unification process as either a “gradual” or “radical” unification process. The gradual type refers to a steady progress that both the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undertake with several steps and stages for unification. A radical type indicates the rapid process of unification that results from a case where one of the players experiences a sudden change or contingency.
- The study also classifies unification types by the relative weight of tasks for unification. The “symmetrical” type of unification refers to



one in which North and South Korea perform tasks together with equal efforts. On the contrary, the “asymmetrical” type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one of the parties puts relatively more effort than the other into the unification process.

- Four unification types are suggest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unification speed, and relative weight of the tasks. The types are: ① Equivocal type (Gradual-symmetrical), ② Abrupt type (radical-symmetrical), ③ Guiding type (gradual-asymmetrical), and ④ Absorptive type (radical-asymmetrical).
- The gradual type of unification refers to a scenario in which negotiations for the unification process naturally initiate successful domestic reform in North Korea. The radical type of unification refers to a scenario in which unification talk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precede rapidly because of a sudden or unexpected contingency in North Korea.
- As speculated above, a symmetrical type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both players equally participate in the unification process and put forth the same amount of effort to achieve unification. An asymmetrical type indicates that one of the party plays a leading role in the unification process while the other party plays a supporting role so that their inputs become unbalanced.

- Considering the factors of desirability, feasibility and probability,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Guiding type of unification is expected to be the most feasible scenario (gradual-asymmetrical).
- The Guiding type (gradual-asymmetrical) is a hypothetical, yet the most plausible scenario that describes a situation in which North Korea starts to acknowledge the success of South Korea's economy, and begins asymmetrical unification talks that precede according to a consensus agreed by both parties.
- The leading role of South Korea in North Korea's reform process can be positively acknowledged by North Koreans. Since the world witnessed the economic achievements of South Korea, its modern and liberal economic reform can be an alternative system for the North Koreans. North Koreans' positive perspective towards the South Korean system could effectively proliferate the idea and need for a transformation of the current system in North Korea.
- Regarding the Guiding type of unification process requires a consensus from both parties as proven by the Eastern European case where the ideas of liberalism eventually spread after a long period of economic hardship. It is concurrently plausible to conclude that the Guiding type of unification is the most feasible scenario.



- This unification scenario assumes that North Korea would start a process of economic reform that is dependent up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re have been doubts about whether China could provide the material support that North Korea needs for fundamental reforms. Moreover, China hopes North Korea will be able to sustain itself through gradual reforms and the open door policy, while North Korea expects to receive huge financial and material aid for temporarily reforming. This fundamental difference would lead North Korea to choose an economic reform process that is dependent up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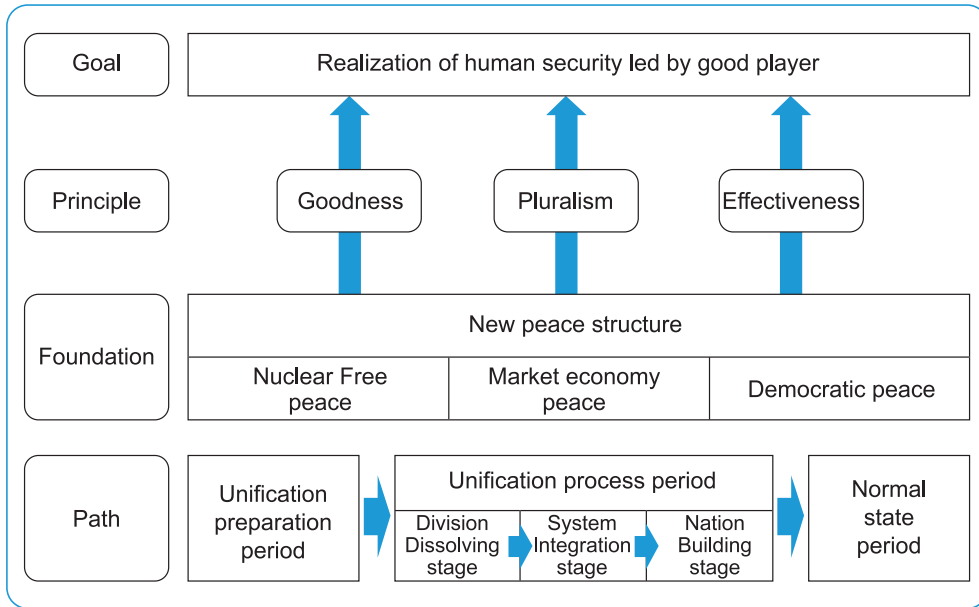
### III

## CONCEPT AND STRUCTURE OF GUIDING TYPE OF UNIFICATION

### 1. Concept for Guiding Type of Unification

- The word “guiding” carries a meaning of “leading” or “leading to the right way.” As shown in the diagram below, the concept of Guiding type includes the purpose, principle, foundation and path of unification.

<Figure> Conceptual Diagram for Guiding Type of Unification



- The ultimate goal of the Guiding type of unification is the realization of human security led by leadership of admirable international actors. As the most advanced concept i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21st century, human security provides fundamental conditions for living.
- This type of unification guarantees that it is not the strong superpower's domination that has control over the weaker state but rather, the process assures that middle powers and small powers can also equally participate in the unification process. Also, non traditional concepts of security such as environmental and health issues are linked together with the traditional concept of security.



- There are three pillars in the Guiding type of unification: ① Goodness, ② Pluralism, and ③ Effectiveness.
  
- Goodness means that unification does not aim to return back to the time of division, but rather pursues a future-oriented policy and the creation of the brand new unified Korea.
  
- Pluralism means a convergence of diverse opinions derived from cooper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from both the North and South Korean citizens, as well as their governments throughout the unification process.
  
- Effectiveness implies that by preceding to the Gradual path of unification, the South Korean people will be given adequate time to evaluate the expected cost and benefits through various steps and stages toward unification. As a result, the potential cost of unification would be minimized.
  
- The fundamental premise of the guiding type of unification is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premise should be secured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Nuclear-Free Peace, Market-Economy Peace and Democratic Peace are the essential foundations for a new peace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 As the very basic condi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should be guaranteed from the starting point of unification until the building of a united nation.
- A market economy and democracy are also key to securing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arket economy peace is also called capitalistic peace and it is derived from the historical experience that national development based on a market economy principle best guarantees peace. In the same way, as the democratic peace theory argues, democratic countries solve problems through a peaceful and democratic method rather than using military means.
- The spectrum of the guiding type of unification is from the present to the moment right after the completion of nation building. The whole process of unification is categorized into three paths which are Unification Preparation, Unification Process and Normal State period. Within the Unification Process Period, this study divides the period into three chronological stages which are Division Dissolving Stage, System Integration Stage and Nation Building Stage.

## 2. Entry Conditions of Guiding Type of Unification

- Changes within the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creation of a favorable international agreement ar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guiding type of unification. Another necessary condition is the North Korean citizens' desire towards unifi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pro-south reformative regime in North Korea.

- Moreover, South Korea's willingness and capability for unification will be required as a supplemental condition. Thus, an exchang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in terms of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interactions is also required.
- In order to realize unification, it would be mistaken to ignore the role that superpowers play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where peaceful unification is welcomed under a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is critical.

### **3. Path of the Guiding Type of Unification**

- Outbreak of chances for the guiding type of unification can result from a weakened North Korean regime.
- Some of the factors weakening Kim Jung Eun's leadership include changing social attitudes of North Korean citizens due to external information inflow, economic sanctions towards North Korea, a deepening economic crisis caused by changes in the Chinese economic

system and a power struggle between the North Korean elites. A weakened leadership brings division of power and alliance among the ruling class, which could lead to domestic contingencies and the collapse of the regime. In this path of unification, this study assumes that a bottom up revolution and desire for unification would appear along with the weakening of central leadership. Such changes and needs within North Korea will not merely contribute toward domestic reform but will also help to create a reformative regime.

- Considering the complex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this study divides the entry stage of unification into three periods.
- The first period, Kim Jung Eun's leadership will be weakened as a result of a combination of complex factors like political division, changing attitudes of North Korean citizens and economic crisis.
- The second stage is a period when numerous regimes appear and collapse repetitively because of a division of power within the ruling class and an incapability of regime survival. Eventually, a reformative regime supported by the North Korean public would appear.
- The third stage, a new reformative regime starts to operate, putting its new policy in action to meet the public's needs. The policies however, would be limited because of lack of internal resources. Therefore, a



negoti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is likely to be held in order for North Korea to access usable resources from the South.

## IV / POLICY IMPLICATIONS

### 1. Policy Suggestions

#### 〈Basic Principles of the Guiding Type of Unification〉

- Unification policy should be comprehensive, gradual and closely connected to each other.
- Firstly, since unification is a revolutionary event that changes the living quality and foundation of life for every citizens on the Korean Peninsula, comprehensiveness of the policy is especially required.
- Secondly, linkage between the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should be considered while the policy is implemented. Also effects of each policy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 Thirdly, since it is often argued that there is a lack of consistency between policies, the new policy should be pursued gradually while the effects of prior policy are still implemented.

## 〈Creation of National Consensus towards the Guiding Type of Unification within the South Korean Society〉

- The guiding type of unification has a condition that unification would not degrade the quality of life for South Korean citizens. To create 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any negative impression toward unification should be eliminated. Therefore, a policy that can help reduce the anxiety towards unification is highly desirable.
- By merely looking at the cost of unification, South Korean society has a tendency to regard unification as an burden since the cost focused not only on economic and material losses but also intangible losses which could lower the quality of life. In order to eliminate such concerns, the fact that the costs of unification would not exceed the economic capabilities of South Korea should be promoted.
- The unification cost should be spent within the range that South Korea can afford and excessive cost of unification caused by radical changes in North Korea can be solved by adjusting the time and speed of the unification process.



## 〈Secure International Supports for the Guiding Type of Unification〉

- South Korea should work to promo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serve as an leading role model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
- Among the countries that gained independence right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South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accomplished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simultaneously. By promoting this success, South Korea can s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a unified Korea would play an leading role in the society.
- At the same time, a plan to help alleviate any concer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a unified Korea could become a powerful country that can threaten its neighboring countries should be considered.
- Undoubtedly, active public diplomacy needs to be initiated in order to secure international support for Korean unification. With its elevated stat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uth Korea must strengthen its public diplomacy and public policy towards neighboring countries in East Asia.

### 〈Inducing the Changes from North Korea〉

- To transform North Korea into a “normal” state, economic hardship and autocracy need to be abolished. Thus, in order to relieve North Korea’s economic crisis, South Korea should persuade North Korea by showing the benefits of interacting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By transforming the autocratic regime into a democratic system, the aggressive and hostile image of North Korea could be abolished.
- In order for North Korea to become a recognized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political support from South Korea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critical.

## 2. Considerations

- Strengthening the national capability, drawing national consensus and comprehensive policy promoting system are the crucial factors needed for unification policy promotion. The most fundamental condition for a peaceful and smooth unification process is strengthening the national capability. By drawing national consensus, the policy would be more effectively implemented. Since unification requires efforts not only from individual level but also from the governmental level, a comprehensive governance system should be created.



- There are three things that should be avoided when implementing an unification policy. Firstly, South Korea should try not to emphasize the fact that unification should be naturally desired by both sides. Secondly, South Korea should avoid provoking North Korea by taking a more pragmatic approach, and lastly, South Korea should avoid excessively expressing its confidence in achieving eventual unification. Therefore, a policy based on unification policy principles, and one that is practical, should be effectively presented to North Korea.
  
-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depend on the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regional actors such as Chin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Russia. Thus, excessive promotion of unification should be avoided. South Korea should be careful not to give a distorted impression to its neighbors that an unified Korea can be a threat to them.



##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가.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그 동안 국제 및 국내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함.
-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는 경제적 역동성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보여주는 가운데,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부상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의 국제관계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음.
- 미·일·중·러 주변4국에서 2012년 말까지 정권 교체·유지·승계 수순이 마무리되고, 2013년 초에는 주변4국의 지도부가 향후 4~5년간 대외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북한에서도 2011년 말의 김정일 사망과 2012년에 진행된 김정은으로의 3대 권력세습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북한은 2013년의 주변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한반도 주변정세 및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초당적 대북정책의 도출을 위해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



-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경로와 방식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에 근거한 통일과정의 식별과 단계별 정책과제의 제시 및 효과적 수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연구의 방법

-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연구진에 의해서 사안별로 순차적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개최
- 총 6차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는 사전에 합의한 방식에 의해서 점증적으로 내용을 축적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
  - 제1차 회의: 주제의 식별
  - 제2차 회의: 통일의 경로 분석
  - 제3차 회의: 통일의 단계 설정
  - 제4차 회의: 통일의 분야별 과제 제시
  - 제5차 회의: 통일과제의 수행 효과 분석
  - 제6차 회의: 통일 및 대북 정책 대안 도출
- 주제의 식별과 관련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 완성이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분단되기 이전으로 회귀하는 과거지향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통일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미래지향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간주
- 통일의 경로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당위성(Desirability), 실현성(Feasibility), 발생가능성(Probability)의 3가지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

-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로를 선정하여 집중 연구

○ 통일의 단계와 관련 ①분단해소단계, ②체제통합단계, ③국가완성단계의 3단계를 설정, 시간적 체계성을 확립

- 선행단계 과제와 이후단계 과제 간 정합성 확보에 주력

○ 통일의 분야별 과제를 사회과학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①정치분야, ②경제분야, ③사회분야의 3분야로 구분하여 단계별 과제를 제시

- 분야별 과제가 상호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

○ 통일과제의 수행효과 관련하여 3단계·3분야에 대해서 제시된 과제를 수행할 경우 예상되는 분야 내의 효과 및 분야 간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종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제시된 과제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정책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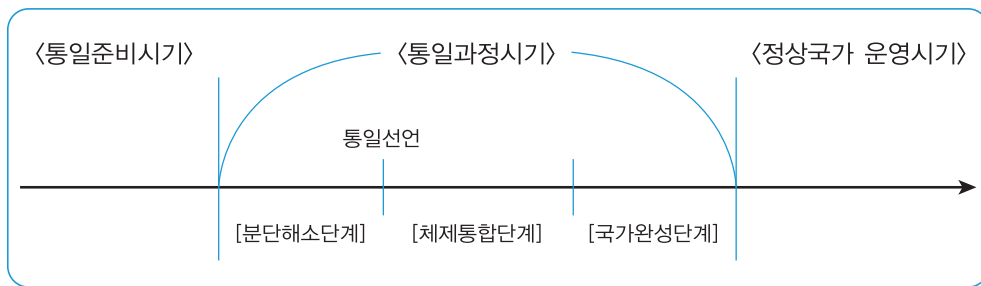
○ 통일 및 대북 정책 대안은 6차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취합된 미래지향적 통일 과제 및 수행효과를 기반으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정책대안을 총체적 방향성과 함께 각론적 차원에서 도출



## 2 연구의 대상시기

- 통일과 관련한 시기적 고려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일에 이르는 전반적 과정을 포괄적 차원에서 ①통일준비시기(현재시점에서 통일과정에 진입하는 시기), ②통일과정시기(통일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과정), ③정상국가 운영시기(통일이 완성되어 통일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기)로 아래 그림과 같이 구분하였음.

〈그림 1-1〉 연구의 대상시기: 통일의 시간표<sup>1)</sup>



- 통일준비시기는 본 연구의 주요 대상시기는 아니며, 통일과정에 진입하기 직전까지의 시기로 상정
  - 한반도가 분단된 시점에서부터 대한민국이 통일을 국가의 주요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준비시기의 국가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sup>1)</sup> 자세한 내용은 김규륜 외,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22~27 참조.

- 정상국가 운영시기는 통일과정이 진행되어 분단시절의 문제점을 기억할 필요조차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단일한 통일국가로서 정체성이 확립된 상태를 의미함.
- 본 연구의 주요범위인 '통일과정시기'는 통일준비시기부터 일정한 과도기를 지나 통일을 선언하고 실질적인 통합과정을 진행하여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시점까지 설정하고, 이를 ①분단해소단계, ②체제통합단계, ③국가완성단계의 3단계로 구분함.
- 분단해소단계는 통일과정으로 진입한 이후의 첫 번째 단계로써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실질적인 사안으로 간주하고 통일협상을 진행하는 통일선포 직전의 단계임.<sup>2</sup>
  - 통일을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분단해소단계는 약혼기간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통일의 실현을 전제로 한 과도기 성격을 가짐.
  - 남북협상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통일선언을 함으로써 분단해소단계는 체제통합단계로 넘어가게 됨.
- 체제통합단계는 통일과정시기의 두 번째 단계로써 남한과 북한이 통일국가를 선포하는 통일선언으로 시작되며,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에 대한 제반 통합과정이 진행되는 단계임.<sup>3</sup>

<sup>2</sup> 위의 책, pp. 83~85.

<sup>3</sup> 위의 책, pp. 85~86.



- 국가완성단계는 통일과정시기의 세 번째 단계로써 이전 단계에서의 남북 통합작업의 결과 대부분 분야에서 통합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민 개개인들이 느끼는 사회심리적 문제들을 정리하는 단계임.<sup>4</sup>

### 3 연구의 대상분야

-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주요 주체를 남한과 북한 및 국제적 행위자 등 3대 대상을 파악하여 분석
  - 남한은 해방 이후 분단을 거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을 견인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기능함.
  - 한반도의 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 또한 중요한 주체임에는 틀림없으며 특히, 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의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파악됨.
  - 한반도의 분단이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행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주요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파악이 긴요함.
- 본 연구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비롯될 각종 사안을 점검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과학적 분류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의 3대 영역을 연구대상으로 정함.

<sup>4</sup> 위의 책, pp. 87~88.



- 3대 영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있어서 분야별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효과적 수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분야별 과제의 도출과 함께 분야 간 파급효과 및 연계사안을 식별하고자 함.
- 분야별 과제를 상기한 3단계와 연관해서 분석함에 있어 분단해소단계에서는 정치영역, 체제통합단계에서는 경제영역, 국가완성단계에서는 사회영역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임.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 II. 통일유형

- 한반도 통일의 유형을 통일과정의 진전속도에 따라 점진형과 급진형으로 구분
  - 점진형은 단계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이며, 급진형은 어느 한쪽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통일과정이 단기간에 진행되는 경우임.
  
- 통일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에 따라 대칭형과 비대칭형로 구분
  - 대칭형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과정에서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이며, 비대칭형은 남한과 북한 중에서 어느 한쪽이 상대적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임.
  
- 통일의 진전속도와 수행역할 비중에 따라 통일유형을 ①균등형(점진-대칭), ②급변형(급진-대칭), ③선도형(점진-비대칭), ④흡수형(급진-비대칭) 4가지로 구분
  - 점진형은 북한의 내부개혁이 성공하여 남북한 통일협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로 상정하였으며, 급진형은 북한 사회의 예상치 못한 내부변동으로 인해 남북한 통일협상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로 상정함.
  - 대칭형은 남과 북이 동등한 관계로 남북협상을 진행하여 통일과정

〈표 11-1〉 통일유형 구분

	점진형	급진형
대칭형	유형 I: 균등형	유형 II: 급변형
비대칭형	유형 III: 선도형	유형 IV: 흡수형



에 진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비대칭형은 남과 북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통일과정 진입을 말함.

-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4가지 통일유형에 대해서 당위성(Desirability), 실현성(Feasibility), 발생가능성(Probability) 등의 3대 기준에 따라 가장 현실가능한 통일 유형 선정
  - 선도형 통일(유형Ⅲ: 점진-비대칭)을 현실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높은 통일유형으로 선정함.

## 1 / 유형 I : 균등형

- 균등형(점진-대칭)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과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통일협상을 진행하는 통일유형
- 균등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개혁이 매우 성공적으로 결합 되는 경우에 한에서만 가능한 이상적인 통일유형
  - 북한 내부개혁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북한 내부개혁이 성공하더라도 북한 사회의 기득권층과 북한 주민 모두에게 통일에 대한 유인동기가 낮아 통일과정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음.
- 균등형 통일 과정은 남한사회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뿐 현실가능한 통일유형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

## 2 / 유형Ⅱ: 급변형

- 급변형(급진-대칭)은 북한의 내부변동에 의해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남한과 북한이 동등한 상황에서 통일과정을 진행하는 통일유형
- 급변사태에 대한 2가지 발생요인 상정
  - 첫째는 북한의 경제개혁 실패, 둘째는 북한의 개혁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민주화 요구에 의하여 사회적 통제력이 급격하게 약화된 상황을 상정함.
- 급변사태의 발생과 남북관계의 대칭적 통일과정 진입은 비현실적 통일유형
  - 급변사태의 발생요인이 어떤 경로이든 간에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지원 특히, 남한으로부터 대규모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인정한다면 남북한 간 대칭적 통일과정은 현실성이 낮음.
  - 독일통일을 보면 동독이 서독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경제적 지원이 실시되는 비대칭적인 통일과정으로 진행되었음.

## 3 / 유형Ⅲ: 선도형

- 선도형(점진-비대칭)은 북한 개혁에 따라 점진적 통일과정이 진행되고 북한 주민이 남한사회를 대안으로 인식하며 남북합의에 의한 비대칭적 통일협상이 진행되는 가장 현실가능한 통일유형



- 선도형 통일에서는 남한의존형 경제개혁과 통일지향이 북한 주민들에게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사회가 대안으로 인식
  - 통일과정이 남북합의로 시작되는 선도형 통일유형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선도형 통일유형에서는 북한 주민이 남한사회를 대안으로 보는 체제 전환적 관념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
  -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위기에 대한 다양한 대응과정에서 체제전환으로 수렴된 역사적 사례를 볼 때 현실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선도형 통일에서는 북한이 남한의존형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상정
  - 북한의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주체는 남한이며 중국이 북한에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경제지원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소 회의적임.
  - 중국은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을 바라지만 북한은 일시적인 대규모 경제지원을 바탕으로 경제개혁을 원한다는 점에 남한의존형 경제개혁으로 귀결될 것으로 상정함.

## 4 / 유형Ⅳ: 흡수형

- 흡수형(급진-비대칭)은 북한의 급변사태와 함께 남한의 주도권을 북한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흡수되는 통일유형



- 흡수형은 독일의 통일과정과 유사하지만 한반도 국제환경이 독일통일의 상황과 과정이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능성이 희박
  - 동독붕괴 과정에서 소련은 오히려 서독 편을 들어줌으로써 동독 지배 엘리트들의 자원동원능력은 매우 제한되었음.
  
- 북한의 경우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자원동원이 가능하기에 북한의 급격한 붕괴로 인한 남한주도형 통일방식은 현실 가능성 희박
  - 내파(Impllosion)에 의한 북한정권의 붕괴에도 중국은 적극적 개입을 통해 친중국정부 수립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90년대 중반이후 북한에 지속적으로 경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대북 봉쇄 전략으로 인해 북중무역이 심화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흡수형은 가능성이 낮음.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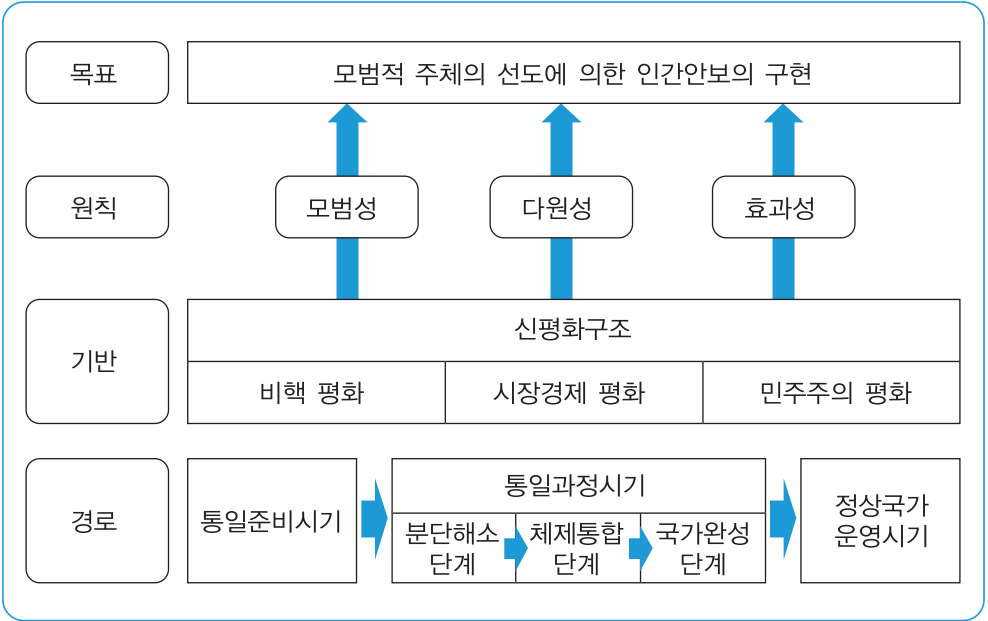
##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 Ⅲ. 선도형 통일의 개념과 구조

# 1 / 선도형 통일 개념도

- 선도형 통일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올바른 선도(善導)와 이끄는 선도(先導)의 의미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며, 아래 <그림 II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추진목표, ②추진원칙, ③추진기반, ④추진경로의 4대 요소를 포함

<그림 III-1> 선도형 통일 개념도



- 선도형 통일의 추진목표는 인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간안보의 궁극적 구현으로 모범주체에 의해서 선도
  - 인간안보는 21세기 국제관계에서 가장 발전된 개념으로 인식
  - 인간안보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충족
  - 강대국의 지배가 아닌 중견국가와 약소국의 동시 참여를 보장

- 군사적 차원인 전통적 의미의 안보에 더해서 환경, 보건 등 비전통적 안보 요인을 포괄
- 선도형 통일의 추진원칙은 ①모범성, ②다원성, ③효과성의 3대 요소를 지향
  - 모범성은 분단이전 상태로의 회귀인 과거지향적 통일이 아닌 미래 지향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써 한반도에 새로운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 다원성은 통일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의 양대 주체 정부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동시에 상호이해에 따른 협력의 추진을 의미
  - 효과성은 통일과제의 단계별 추진을 통해 성과가 축적되어 진행되는 점증적 방식과 통일과제의 수행에 의한 역효과를 사전에 파악하여 역류현상을 방지하는 것을 모두 포함
- 선도형 통일의 추진을 위한 기본전제는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통일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써, ①비핵평화(Nuclear-Free Peace), ②시장경제평화(Market-Economy Peace), ③민주주의 평화(Democratic Peace)의 3대 요소를 포괄하는 종합적 사고에 입각한 한반도의 신평화구조에 기반
  - 비핵평화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평화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써 현 시점에서부터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에도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
  - 시장경제평화는 자본주의평화라고도 하며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국가의 발전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역사적 경험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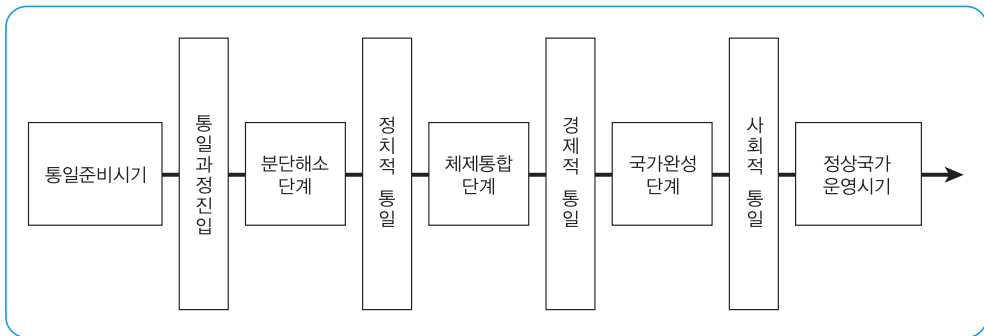
- 민주주의평화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 간에는 군사적 수단에 의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갈등해소가 선호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함.

○ 선도형 통일의 추진경로는 현재부터 통일국가가 완성된 이후 시점까지를 통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림 Ⅲ-2>와 같이 일관되고 체계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통일의 전 과정을 제시

- 우선적으로 통일의 전 과정을 통일준비시기, 통일과정시기, 정상국가 운영시기의 3대 시기로 구분

- 통일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통일과정시기를 분단해소단계, 체제통합단계, 경제적 통일, 국가완성단계, 사회적 통일의 5단계로 구분

<그림 Ⅲ-2> 선도형 통일 흐름도



## 2 / 선도형 통일 진입조건

- 선도형 통일경로 진입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 북한상황의 변화와 국제환경 조성의 필요조건과 남한의 의지와 능력인 충분조건 필요
  - 필요조건은 북한 주민이 통일을 원하고 개혁통일지향의 북한정권이 등장하여 국제적으로 통일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임.
  - 충분조건은 남한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고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남북한 경제교류 확대,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남북한 정치협상을 실시하는 것임.
  
- 선도형 통일의 진입을 위해 미국, 중국등 강대국과 UN 등의 국제기구가 한반도 통일과정에 반대하지 않고, 남북한 합의에 의한 주도적 통일과정 추진이 가능한 통일 우호적 국제적 환경 조성 필요
  
- 남북한 합의에 따른 선도형 통일을 위한 선행조건
  - 현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미국, 중국이 한반도문제에 대하여 국제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차단해야 함.
  - 북한 핵문제가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해결되거나 북한정권에 의해 핵무기 및 핵물질의 통제가 이루어져 핵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해소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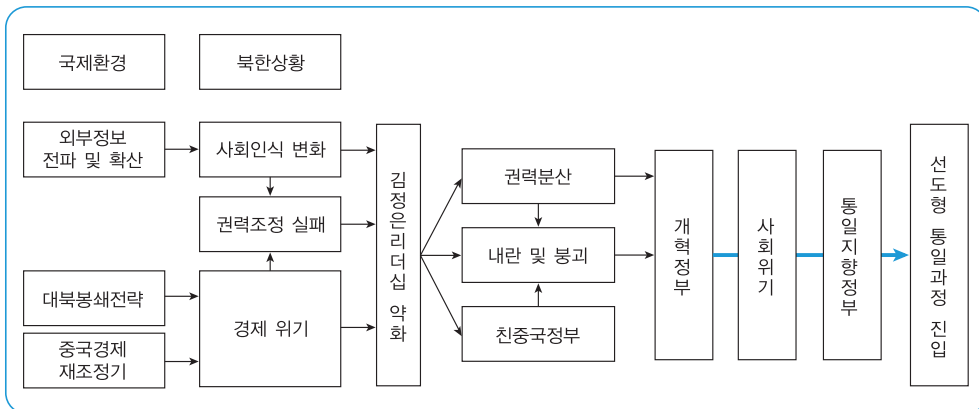


### 3 / 선도형 통일 경로

- 북한정권의 리더십 약화에 따른 선도형 통일의 진입 상황 발생
  - 외부 정보유입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 경제붕쇄 및 중국경제의 재조정기에 따른 북한 경제위기의 심화, 북한 엘리트 세력 간의 노선과 정책의 충돌에 따른 권력조정의 실패 등의 각종 요인에 의해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 약화가 발생함.
  - 리더십의 약화는 지배연합 분열과 권력 분산, 급변상황인 내란과 정권붕괴 등의 결과를 초래함.
  - 선도형 통일 경로에서는 중앙권력 리더십 약화에 따라 아래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개혁 및 통일 지향적 요구를 받아들여 개혁정부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 개혁정부가 자발적인 개혁과 성장 모델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가정은 본 연구의 이탈경로이며 연구대상에서 제외
  - 북한 지역에 남한사회를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통일지향적 개혁정부가 연구대상임.
  
- 복합적인 정치·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선도형 통일을 3단계 진입과정으로 구분
  - 1단계는 북한 주민의 인식변화, 정치적 균열, 경제위기 등의 복합적 상황으로 인한 김정은 정권 리더십 약화 초래
  - 2단계는 김정은 정권 리더십 약화에 따른 권력 분산과 정권의 생존능

- 력 한계에 따라 짧은 기간에 다수 정권의 등장과 소멸이 반복된 후 북한 주민의 요구에 의한 북한 개혁정부 등장
- 3단계는 개혁정부가 북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시도하지만 실제로 내부자원의 한계에 의해서 개혁프로그램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거나 실행되지 못함.
  - 개혁프로그램을 위해 남한으로부터 가용 자원 도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통일지향정부의 등장으로 선도형 통일과정으로 진입함.

〈그림 III-3〉 선도형 통일과정 진입경로



- 선도형 통일경로로 진입하는 조건과 경로를 살펴보면 아래 〈표 III-1〉와 같음.

〈표 III-1〉 선도형 통일경로 진입조건 및 경로

		조 건	경 로
정치	북한	- 개혁-통일지향 <sup>5</sup> 의 정권 등장	- 남북한 경제, 사회문화교류 확대 - 북한정권 권위 약화, 권력분산, 사실상의 정권붕괴 등을 통해서 개혁성향 정권 등장
	남한	- 한국사회의 통일에 대한 능력과 의지 결집	- 통일국민협약 추진 - 초당적 통일 추진체계 구성
	국제	-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 국제환경	- 북한의 행위의 폭이 넓어짐 -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 IAEA에 의한 핵통제
경제		-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추구	- 남한과의 경제교류가 확대된 상황 - 군수경제가 민수경제로 전환
사회		- 북한 주민의 인식변화로 인하여 남한사회를 대안으로 여기고 통일협상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상황	- 외부정보의 유입, 확산, 수용 - 상업시장을 매개로 한 가치관의 변화

<sup>5</sup> 경제적 자유화(특권이 아닌 시장의 가격법칙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화), 정치적 자유화(일당독제 폐지, 정치적 다원주의 허용의사, 국제사회로부터 근본적 개혁개방의지를 인정받음), 민족지향(중국과 관계를 통해서 체제유지 보다는 남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체제유지), 비핵화 의지 표명.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 IV. 선도형 통일 영향요인

- 선도형 통일의 영향요인을 한국상황, 북한상황, 그리고 국제환경으로 구분
  - 남한은 통일을 위한 경제적 능력, 국민합의 및 의지가 필요함.
  - 북한은 북한사회 내부의 변화가 통일과정에서 필요하며 북한 주민이 남한사회를 대안으로 인식하고 통일을 원하는 주민의 요구를 북한정권이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함.
  - 남북한 통일과정 진입에 대한 우호적 국제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 1 / 한국상황

- 통일시점에서 통일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한국의 경제적 능력 확보 필요
  - 독일의 경우 통일시점에서 서독은 세계정상 수준의 경제력 보유, 동독의 경우 사회주의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수준을 유지함.
  - 2012년 남북한의 경우 독일의 통일시점에 비해 경제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을 인식하고 저비용 고효율 통일과정의 추진을 위해 한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및 북한 지역의 경제 상황 호전 등의 조건이 필요함.
- 선도형 통일을 위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통일 의지 마련 필요
  - 통일 의지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의미함.
  - 통일에 대한 소모적 정쟁 지양과 남남갈등 완화가 필요함.



- 통일재정 확보 및 인프라 구축 등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준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함.

- 통일시점 대비 한국의 이상적 상황은 지속적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력 보유,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정부의 의지와 대비 및 정책적 추진능력의 확보에 있음.

## 2 / 북한상황

- 선도형 통일에서는 북한사회 내에서의 인식 변화, 북한정권의 생존능력 한계에 따른 사실상의 정권붕괴 및 개혁개방, 통일지향적 정부 등을 고려

### 가. 북한사회의 인식

- 북한 주민의 인식변화는 북한사회로의 외부정보 유입,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 그리고 신흥 상업시장 세력의 등장으로 구분
- 북한사회로의 외부정보 유입은 북중 변경지역의 무역의 활성화와 접경 지역 통제 한계로 인한 일반적 현상
  - 접경지역의 북한 주민들은 서방 영화를 보거나 라디오를 통해 한국 방송을 청취하는 현상이 나타남.



- 북한의 주민들이 기존의 배급제에서 상업시장을 통한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 발생
  - 식량위기로 시작된 배급제의 붕괴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공장을 이탈하여 상업시장을 매개로 생존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가치관의 근본적인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평양 내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면 전 사회계층에서 수령 및 사회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한 가치관 이탈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상업시장을 통한 자력갱생을 요구하는 북한사회의 변화는 신흥 상업시장세력의 등장 및 확산 초래
  - 신흥 상업시장세력은 국가중심이 아닌 상업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사회세력이며 과거와는 다른 사회인식을 지니고 있음.
  - 신흥 상업시장세력의 등장은 북한정권의 내부자원 한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개혁개방을 유인할 것으로 판단됨.
  - 상업시장을 통한 한 인식의 변화와 신흥 세력등장은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나. 북한정권의 생존능력

- 북한정권의 생존능력은 정치적 리더십과 경제개혁 두 가지 요인으로 평가 가능
  - 정치적 리더십과 경제개혁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되며 궁극적으로



로 경제개혁의 성공이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북한의 개혁개방은 주민의 요구와 함께 정권의 생존능력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추동될 것으로 판단
  - 정권의 위기는 내부자원 동원능력의 한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외부자원 유입을 위한 개혁개방이 필요함.
  
- 북한정권 생존능력의 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개혁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거나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이 약화된다면 내란의 발생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권력의 등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개혁적이고 통일지향적이면 남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남한사회를 대안으로 하는 선도형 통일이 가능함.

### 다. 정권변화 이후 정부

- 선도형 통일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북한정권이 취약한 리더십을 보유한 개혁정부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북한의 새로운 정부가 과거보다 강화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기득권 유지 및 보호 차원에서 통일지향 세력이 되기 어려울 것임.
  - 기존 리더십의 약화는 권력의 분산을 초래하여 개혁정부가 바로 등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권력 내부 갈등 조정 이후, 이전보다 약한 리더십을 보유한 개혁정부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선도형 통일에서 상정하고 있음.

- 북한 정권변화이후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 북한 지역의 전국적 장악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함.
  - 북한의 새로운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남한의 역할과 기여가 중요하며 북한의 신지배세력이 남한을 대안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함.
  - 북한 지역의 지방세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도 남한의 기여가 필요함

## 라. 남한의존형 개혁개방

- 북한이 정권변화 이후 새로운 사회주의로의 개혁을 위한 3가지 가능성 존재
  - ①내부의 힘으로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방안, ②중국의 물질토대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방안, ③남한의 물질토대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방안이 존재함.
  - 북한 자체의 물질토대가 매우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중국 또는 남한의존형이 새로운 사회주의로의 개혁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것임.
  - 선도형 통일유형에서는 북한지배엘리트가 중국의존형 개혁보다는 남한의존형 개혁을 선택할 것으로 상정하고 있음.
  
- 개혁개방의 물질토대는 북한의 사회, 경제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상업시장 형성에 따른 북한 주민 의식 변화 및 남한의존형 통일지향 개혁정부의 등장으로 상정함.



## 마.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

- 북한의 개혁개방은 대외관계 정상화 과정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큼.
  - 북한의 개혁개방은 북미관계, 북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경제제재 해소와 해외자본 유입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음.
  - 대외관계 정상화는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그 궤를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를 통해 개혁개방이 남한의존형으로 전개된다고 해서 선도형 통일경로로 진입하는 것은 아니며 북미·북일관계의 정상화를 고려해야 함.

## 바. 북핵문제

- 통일과정 진입 이전에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선도형 통일경로로 진입 가능
  -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대외관계 정상화를 통한 외부자원의 북한 유입이 개혁개방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통일준비시기에서 남한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향후 통일과정 속에서 남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효과가 발생함.

### 3 / 국제환경

#### 가. 동북아시아 동맹관계

-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따라 북한문제의 입장 변화
  - 중국의 기본 입장은 남북한 자체적 합의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지만 만약 미국의 개입한다면 중국도 개입한다는 입장을 가짐.
  - 미군의 북한 지역 진입과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서는 작전을 수행할 경우 중국도 개입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 미중관계가 대립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화한 미안마, 인도의 사례를 볼 때 한반도 문제에서도 협력관계가 가능함.

#### 나. 중국의 경제상황

- 중국의 경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조정기를 거칠 경우 북한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및 북한내부 경제능력의 불안정성으로 남한과의 경제협력 필요성 증대
  - 중국경제의 위기는 북한경제의 위기로 이어지며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남한의존형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큼.
  - 중국에서 경제위기가 오면 남한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다. 국제기구의 개입가능성

- 한반도 문제 발생시 국제기구의 개입으로 남한이 배제될 가능성 존재
  -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국제기구의 개입가능성이 존재함.
  - 남북한 간 합의에 의해 주도적으로 통일과정으로 진입한다면, 국제사회 및 주변국들의 개입가능성이 다소 낮을 수 있음.
  - 선도형 통일이 친남한, 통일 성향의 개혁정부 및 북한 주민들의 통일지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제적 개입은 제한된 의미에서만 고려됨.

##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 V. 선도형 통일의 단계별 정책과제



# 1 / 분단해소단계

## 가. 정치분야

### (1) 목표설정

- 분단해소단계의 정치분야는 남북한 정부 간 통일협상을 통하여 ‘(가칭) 통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한국의 체제 및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통일헌법을 제정한 후 통일선언 실시를 목표로 함.
  - 통일선언 이후 통일정부 수립까지는 ‘(가칭)통일추진위원회’가 통일 과정을 관리함.
  - 독일의 경우 동독 민주화 이후 통일이 이루어졌으나 남북한 선도형 통일은 북한의 개혁통일지향 정부가 구성된 이후 남북한 정부 간 합의를 통해 ‘(가칭)통일추진위원회’가 통일과정을 관리하고 통일을 선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북한 민주화 및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구성은 분단해소 단계 이후 체제통합단계에서 실시됨.
  - 독일 통일경로 : 동독 민주화 → 동독 자유총선거 → 동독 신정부 구성 → 동서독 권력구조 합의 및 통일헌법 마련 → 통일선언 → 전국 자유총선거 → 통일정부 구성
  - 선도형 통일경로 : 북한 개혁통일지향 정부 등장 → ‘(가칭)통일추진위원회’ 구성 → 남북한 체제 및 권력구조 합의 및 통일헌법 마련 → 통일선언(이상 분단해소단계) → 북한 지역 민주화 → 남북한 자유총선거 → 통일정부 구성(이상 체제통합단계)



- 통일과정의 진입을 위해 미·중 간 이해관계 조정 등 우호적 국제환경 마련 필요
  - 선도형 통일을 위해 미·중 간 이익조정외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북핵문제의 해결 등 국제사회로부터 통일한국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2) 수행과제

### (가) 핵심과제 도출

#### 〈통일협상 프로세스〉

- 통일한국의 체제 및 권력구조의 마련을 위한 국내적 합의 도출과 남북한 간 정치협상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진행
  - 통일문제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심각한 국론분열로 인해 오히려 통일역류가 발생할 수 있음.
  - 국내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영수회담을 개최하여 통일한국의 권력구조에 대한 잠정합의 도출이 필요함.
  - 영수회담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국회동의 절차와 함께 사회단체 연석회의,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
  - 국내적 합의절차 이후 남북한 최고통치자 간 담판을 통해 통일한국 권력구조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고 통일의지를 담아 남북정상선

언 형태로 발표함.

-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다시 국회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사업을 진행함.

-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남북한 간 정치협상은 단기간 내 합의 도출 필요
- ‘(가칭)통일추진위원회’는 남북한 통일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구이며 통일선언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통일한국을 인정받기 위한 잠정적 기구의 역할 수행
  - ‘(가칭)통일추진위원회’는 통일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통한 북한 지역 민주화와 통일과정 진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 ‘(가칭)통일추진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남북한 합의로 정하되 1~2년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시한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정치·경제체제 협상안〉

- 통일한국의 정치·경제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전제로 구성
  -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 자유·복수정당제, 자유선거, 보편적 인권,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관련된 사항은 남북한 정치협상과정에서 기본적인 전제임.
  - 선도형 통일경로는 북한이 한국사회를 대안으로 인정하는 상황을



가정하기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짐.

- 통일한국의 국가형태는 단방제와 지방자치제를 고려
  - 통일한국은 단방제를 채택하고 북한 지역의 민주화 진전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를 점진적으로 폭넓게 허용함.
  - 북한은 외교·국방은 중앙정부, 기타 내치는 지역정부가 담당하는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연방제는 선도형 통일의 형태와는 다르며 오히려, '사실상의 분단상태'를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내전발발 가능성이 내재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미국이나 스위스와 같은 '도(道) 단위 연방제' 도입 주장도 있으나 남북한 모두 오랫동안 단방제의 전통을 유지해왔을 뿐 아니라, 도(道) 단위가 자율적인 정치행정단위로 기능할 여건도 부재한 상황임.
  - 남북한 간 지역적 차이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 수준의 인위적 동질화 보다는 점진적으로 남한 지역 수준으로 지방자치제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는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고려
  - 대통령제는 권력의 승자독식체제라서 남북한 간 권력구조 합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합의되더라도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 간 심각한 정치균열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 대통령은 직선, 총리는 의회 다수당에서 배출하여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프랑스식 의원집정부제도 고려할 수 있으나 통일한국의 경우 인구구성상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남한에서 배출될 가능성

이 높아 대통령제의 승자독식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 미국식 정·부통령제를 도입하여 대통령 후보는 남한 지역, 부통령 후보는 북한 지역에서 추천받는 방법도 있으나 권력의 속성상 부통령은 실권이 없는 상징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권력구조 합의 및 지역갈등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의원내각제의 경우 통상 원내 제1당을 중심으로 여타 정당들이 연정을 구성하므로 북한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도 정부구성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고 권력구조를 합의하고 향후 지역갈등을 완화하는데 유리할 것임.
- 독일의 의원내각제와 같이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선출과정에서 다수결주의보다는 협의주의(Consociationalism)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sup>6</sup>

○ 통일한국의 의회 구성은 불완전 양원제의 도입 필요

- 양원제는 상하원에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완전 양원제와 하원에 우월한 권한을 부여하는 불완전 양원제로 구분되는데 통상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완전 양원제, 의원내각제에서는 불완전 양원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음.
- 불완전 양원제는 북한 지배엘리트들에게 정치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통일이후의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sup>6</sup> 협의주의에 대해서는 Arend Lijphart, "Typologies of Democratic System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1, No. 1 (April 1968), pp. 3~44 참조. 협의주의는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갈등이 첨예한 북유럽 국가들에서 공동체질서를 유지하고자 발전시킨 정치모델로서 엘리트 간 타협을 통해 소수세력에게 수적 대표성을 상회하는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임.



- 통일한국의 경우 하원이 실권을 가지는 불완전 양원제를 채택하되 남북한 간 지역갈등 완화 차원에서 상원의 권한을 영국이나 일본보다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표성 원칙을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유지가 타당하나 통일 직후 정당난립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하원 의원 선거제는 통일과정의 진행상황을 고려하며 채택해야 함.
- 상원의원은 도 단위로 2명씩 선출하되 남북한 지역 간 동수가 선출될 수 있도록 행정단위를 조정하는 방안과 특별 지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sup>7</sup>

### 〈국제 환경〉

- 남북한 통일과정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위협받지 않는 조건에서 가능하며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이해관계 조정은 필수적임.
  - 통일한국에서 북한이 중국과 맺은 「조·중 우호협력 및 원조 조약」은 파기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유지함.
  - 통일로 인한 동북아시아 세력균형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 통일한국은 비핵화 약속의 이행과 북한 지역 내 주한미군의 배치를 제한함.

<sup>7</sup> 남북한 지역 간 동수 선출 방식은 남한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를 모두 도에 편입시켜 10개, 북한도 평양직할시를 제외한 직할시, 특별시를 모두 도에 편입시켜 10개의 도급 행정단위로 통일하여 남측 상원의원 20명, 북측 상원의원 20명을 선출하는 방안임. 특별지명제도에 의한 방식은 기존 행정단위를 유지하는 경우 남한 상원의원은 32명(16\*2), 북한 지역 상원의원은 24명(12\*2)이므로 북한 지역에서 8명을 특별지명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남북한 동수를 유지하는 방안임.

- 통일한국이 새로운 국호로 UN에 재가입하거나 남한의 유엔회원국 자격을 승계하는 등 국제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
  - 남예멘과 북예멘의 경우는 합의통일 이후 새로운 국호인 예멘공화국으로 UN총회 및 UN안보리 거쳐 재가입한 사례가 있음.
  - 서독과 동독의 경우는 흡수통일을 이후 통일독일은 서독의 회원국 자격을 그대로 계승함.

〈표 V-1〉 분단국가의 재통일 시 유엔가입 비교

	분단시기	통일 후
베트남	남북 베트남 모두 UN 미가입	통일베트남 유엔 신규가입(1977.7.)
예 멘	북예멘 UN 가입(1947.9.) 남예멘 독립 후 UN 가입(1967.12.)	예멘 단일국호 UN 재가입(1990.5.)
독 일	동서독 UN 동시가입(1973.9.)	서독이 통일독일의 UN회원국 자격 승계
한반도	남북한 UN 동시가입(1991.9.)	○ 시나리오 I: 통일한국이 단일국호로 UN 재가입 ○ 시나리오 II: 남한이 통일한국 UN 회원국 자격 승계

출처: 조성렬, 『뉴 한반도비전: 비핵 평화와 통일의 길』, 백산서당, 2012, p. 54.

- 북한이 체결한 각종 국제조약이나 의무는 원칙적으로 승계하되 남한이 체결한 국제조약이나 협정 등과 상충될 때는 재협상을 통해 조정할 필요 있음.
  - 통일독일은 폴란드와 「독일·폴란드 국경조약」을 체결하여 주변국과의 분쟁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음.
  - 통일한국이 「조·중 변계조약」을 계승하거나 국내에서 청·일이 맺은 「간도조약」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새로 중국과 국경선 획정조약을 체결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리 제거해야 함.



- 통일한국은 1985년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러 국경조약」을 계승하거나 또는, 러시아 영토에 편입된 녹둔도의 반환을 위한 재협상을 추진해야 함.
  - 북·중 간 체결한 라진항, 청진항에 대한 개발권 및 이용권, 그밖에 무산철광 등 천연자원에 대한 중국사업권의 승계 요구에 대비해야 함.
- 통일이전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수평적 핵비확산 조치 및 핵심 핵시설의 폐기가 필요
- 남한정부는 북한 과도기정부와 협력하여 핵관련 과학자, 기술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제3국 탈출을 예방해야 함.
  - 소련 붕괴시 일부 핵관련 과학자, 기술자들이 취업을 위해 제3국으로 출국하거나 핵물질을 밀거래하여 수평적으로 핵기술이 확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CTR Program)’을 도입하여 핵관련 과학자, 기술자들의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IAEA 특별사찰단을 파견하여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 가동일지 일체와 이미 생산해 보관하고 있는 핵물질에 대한 전면적 통제를 강화하고 핵탄두의 분해 및 대외반출, 핵심장비 제거를 통해 북한의 핵제조 능력을 조기에 무력화해야 함.



## (나) 파급효과

- 권력구조 합의과정에서 '남한 선도형'과 '북한의 합의가능성'의 문제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남한 선도형 권력구조에서 남한 위주로 독식하는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경우 북한의 제세력들의 반발로 합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 권력구조에서 남한 독식 성격이 완화되어 북한과의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남한 선도형 통일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고 남한 내의 반발이 존재하여 북한과의 합의자체를 부정할 수 있음.<sup>8</sup>
  
- 통일과정에서 '실행 가능성'과 '합의 가능성'이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합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과도기(분단해소단계)의 기간이 짧아질수록 북한 당국 및 군부를 비롯한 보수세력의 반발이 커져 남북한 간 합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 합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과도기(분단해소단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북한 간 합의 가능성은 증가하지만, 이후 실행 가능성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sup>8</sup> 남북예멘의 경우 인구비율이 4(북예멘):1(남예멘)이었으나 1990년 5월 50:50의 권력배분에 합의하면서 통일을 선포. 그러나 1993년 4월 총선결과 북예멘 측이 압승을 거두어 실제 권력지형이 북예멘으로 기울게 되자 내전이 촉발되었으며 결국, 1994년 7월 북예멘에 의한 무력통일로 귀결. 이와 관련해서는 김용욱, “예멘과 독일의 통일사례 비교와 시사점: 통합 합의과정 및 통일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pp. 257~296 참조.



## (다) 연계조치

- 남한사회를 대안으로 인정하는 선도형은 유지하되 남북한 간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진행
  - 지역균형 상원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 장관직 균등분배 등 승자독식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다양하게 도입하여 북한 당국 및 보수세력의 반발 유인을 감소시켜야 함.
  - 청문회, 공청회, 정책홍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남북한 합의사항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확산시키고 국내 반대여론을 설득해야 함.
  
- 획기적 경제지원을 통해 남한 선도형 통일과정에 대한 북한 내 지지기반 확대 필요
  - 획기적 대북지원에 대해 국내외적 반대가 존재할 수 있지만, 남한사회를 통일사회의 대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북지원 방식으로 북한의 개혁정권을 지원하여 남한 선도형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확대해야 함.
  - 통일선언 이전 대북 재정지원과 화폐통합 등으로 북한 당국 및 북한 주민들이 통일의 경제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의 채택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이 북한출신 핵 과학자, 기술자들의 재취업교육 및 재취업, 퇴직자에 대한 연금지급 등의 비용을 분담하도록 유도해야 함.

### (3) 기대상황

- 분단해소단계에서는 형식적 통일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 통일은 달성되지 못한 상황
  - 통일헌법 마련, ‘(가칭)통일추진위원회’ 구성, UN재가입에 따른 국제사회의 승인 등이 성사됨.
  - 분단해소단계는 통일에 반대하거나 통일방식에 불만을 가진 주민 및 정치세력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남북 간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고 안정화되기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함.
  
- 북한 내 보수 특권엘리트와 군부 등에서 선도형 통일경로 진입에 대하여 반대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
  - 남한주도 통일에 반대하는 보수 특권엘리트들이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회단체나 주민들을 동원하여 대규모 시위나 파업을 일으켜 통일을 방해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음.
  - 군부의 경우 군 통합 및 감축에 따른 기득권 박탈에 대한 불만감, 이념적 부적응 등으로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예멘의 경우 통일헌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통일이 선포되고 과도정부가 구성되었으나 반발하는 세력에 의해 전면내전이 발생, 북예멘이 남예멘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통일을 달성하였음.
  
-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통일선언을 위한 국제법적 절차 완료 기대



- UN총회에서 통일선언에 대한 지지결의안이 채택되어 통일의 국제법적 절차가 완료됨.
- 북한 핵관련 물질·장비·인력에 대해 IAEA가 통제하는 가운데 핵심 시설 폐기가 실시됨.

## 나. 경제분야

### (1) 목표설정

- 북한 주민과 지배엘리트 등 통일지지 세력 확보
  - 북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구호 등을 통해 통일 지지세력 확보
- 북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토대 마련
  - 통일 이후 시장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통일선언 직전에 남북한 화폐통합을 추진

### (2) 수행과제

#### (가) 핵심과제 도출

- 분단해소단계에서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한 긴급 구호성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여 통일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
  - 북한 주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 남한정부는 통일준비시기부터 북한 상

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제적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함.

-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필요한 식량 및 생활필수품 구비 또는 긴급 수입 계획을 마련하고, 분단해소단계 진입과 동시에 지원을 실시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보건, 교육 등 사회개발 인프라 지원도 시작함.

○ 북한경제 재건계획의 수립과 정부 내 추진체계 구축

- 북한경제 재건계획은 북한경제를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자유화(Liberalization), 거시경제 안정화(Stabilization)를 위주로 구성하고, 사유화(Privatization)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함.
-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위원회 구성 필요

○ 북한 지역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개혁정부에 재정 지원 실시

- 북한경제 재건계획 입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개혁정부의 지지가 필요
- 취약한 북한 정부의 재정능력을 감안한다면 북한 경제의 자유화와 거시경제 안정화는 북한 정부 예산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Budget Support)과 북한 화폐의 가치 보전에 따른 환율안정을 위한 외화지원 정책이 필요함.

○ 북한 지역 경제 인프라 재건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을 검토하고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과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북한의 국가지원전략 계획을 남한정부의 영향력이 제고되는 방향에서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협력하여 수립함.

○ 남북한 화폐통합 준비와 시행 대책 마련

- 초기에는 북한 정부가 환율개혁을 단행하도록 국제금융기구 정책조언과 남한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등을 활용할 필요 있음.
- 화폐통합은 남북한 통일의 상징이므로 분단해소단계에서 준비를 하여 체제통합단계가 시작하면 시행
- 화폐통합 시 남북한 화폐의 교환비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북한에 대한 남한으로부터의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됨.

**(나) 파급효과**

- 분단해소단계의 경제분야는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제반 조치를 통해 정치·사회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화폐통합에 따른 가치의 비율 결정은 사회복지제도의 공여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다) 연계조치**

- 북한정부의 경제적 재정지원은 정치·사회분야의 추진정도에 따라 묵시적으로 연계하는 조치 필요

### (3) 기대상황

- 북한 지역 경제재건 및 북한 주민의 생활 안정화를 통해 경제통합의 여건 확보
- 북한 경제재건, 거시경제 안정화, 자유화, 사유화에 대한 청사진 및 추진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북한 지역의 통일여론 확산 기대
  - 북한 지역 경제재건을 통해 북한 주민의 대남 이주압력이 완화되고 자본주의적 경제통합에 대한 지지 여론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음.

## 다. 사회분야

### (1) 목표설정

- 분단해소단계의 사회분야는 북한 지역에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시민사회가 하나의 주체로서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북한 시민사회는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지지 및 압력, 그리고 민주화와 자유화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며 남한사회를 대안으로 인식함으로써 통일지향성을 가짐.
- 남북한 시민사회의 연대 및 지원을 체계화하여 남북한 시민사회의 통합기반을 마련
  - 북한 시민사회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과 재정을 제공하고 남북한 시민사회의 연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연대감 증진



- 남북한 시민사회의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친 남도’를 강화
  - 전국적 규모의 교류와 협력은 남북한 시민사회의 연계성 향상을 통해 안정적 통일로 이어질 수 있음.

## (2) 수행과제

### (가) 핵심과제 도출

- 남북한 시민사회 연석회의 개최를 통해 북한의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 지역의 자유화 및 민주화가 시대적 지향성을 가지도록 유도
  - 남북한 시민사회의 연대성 강화 방안 마련
  - 남북한 시민사회의 연대성 강화를 통해 북한 시민사회가 정치세력화 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함.
  - 북한 시민사회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북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

### (나) 파급효과

- 남북한 간 사회단체의 교류 확대를 바탕으로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 및 정치적 민주화를 촉진하는 효과
  - 남한 시민사회의 경험은 북한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부차원의 교류와 협력과 더불어 시민사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및 공고화를 이룰 수 있음.

- 북한에서의 시민사회 형성과정은 통일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북한의 보수적 반통일적 행동을 저지시켜 통일과정 진입에 역류하는 여론을 방지하는 효과
-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한 주민의 공통된 의지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나타내어 국제적인 지지와 정당성을 끌어내는 효과

#### (다) 연계조치

- 북한의 시민사회 형성과정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화 지원과 연계되어야 함.
- 북한 주민들의 통일 여론에 대한 지지 및 북한 지역에 형성된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호감과 친남도를 높여야 함.
- 남북한 시민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남한에서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함께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 등 법적 규제 장치 개정 작업을 준비해야 함.
  - 남북한 정부의 통일협상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인정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남한 시민단체들의 경쟁적 지원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시민단체와 정부 간 협조 체제 마련 필요

### (3) 기대상황

- 북한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로 인해 정치적 발언권이 확대되는 상황 기대
- 북한 체제의 개혁성이 강화되어 통일국가로의 사회적 가치관 정립
  - 사회적 담론의 자율성이 증대되며 통일담론을 시대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게 됨.
- 남북한 시민사회의 연대 및 지원의 체계화를 통하여 남북한 지역 단일 시민단체 형성을 도모할 수 있음.
  - 남북한 시민사회의 연석회의, 재정지원, 시민단체 프로그램 공유 등은 단일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는 기반이 됨.

### 라. 종합적 기대상황

- 분단해소단계에서는 형식적 통일을 넘어 실질적 통일을 위해 정치적으로 통일헌법 마련, ‘(가칭)통일추진위원회’ 구성, 국제사회의 인정 등 기대

- 북한 내의 선도형 통일에 반대하고 기득권 박탈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력 고려
  - 예멘의 사례에서 보듯 통일선포 이후 내전을 통한 재통일의 상황을 고려하여 남한주도 통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통일을 방해하거나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통일한국의 선언과 함께 '진실과 화해 방식'에 따른 체제청산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북한 내 인사들의 불필요한 위기의식과 저항행동을 차단함.
  
-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통일선언을 위한 국제법적 절차의 완료 기대
  
- 북한 지역 경제지원과 주민 생활 안정화를 통해 체제통합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통합의 여건 마련
  
- 북한 경제재건, 거시경제 안정화, 자유화, 사유화에 대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북한 지역의 통일여론 확산 기대
  
- 북한 시민사회가 정치세력으로 발전하여 정치적 발언권이 확대되고 통일국가로의 사회적 가치관 증대
  
- 남북한 시민사회의 연대와 지원을 통해 남북한 지역 단일 시민단체 형성 기대



## 2 체제통합단계

### 가. 정치분야

#### (1) 목표설정

-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정부 형성
  - 북한의 각종 독재기구를 해체하고 다원적 정당체제를 도입하여 북한 지역에서 민주화 형성
  - 북한 지역이 민주화되면 통일헌법 따라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정부(의회·행정부) 구성
  - 통일정부가 구성되면 ‘(가칭)통일추진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해체되며 통일정부가 국내외적 대표성을 획득
  
- 분단해소단계가 사실상(*de facto*)의 통일이라면, 체제통합단계는 자유 총선거 실시 및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법적(*de jure*)으로 통일이 완료되는 단계임.
  
- 동북아 지역 내 우호적 안보환경 창출 및 한반도 비핵화 등 새로운 우호적인 안보환경 형성
  - 미·중 간 이익조정이 완료되고 동북아 다자안보기구의 발족 등을 통한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보환경을 창출
  - 모든 핵관련시설의 폐기 및 방사능 오염제거 완료로 한반도 비핵화를 완료

## (2) 수행과제

### (가) 핵심과제 도출

- 북한 지역 당·국가체제 및 독재기구 해체
  - 조선노동당의 특권적 지위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북한 민주화가 불가능하기에 유일지도정당의 지위를 포기하고 다른 정당과의 공정한 경쟁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함.
  - 조선노동당 중앙조직 중 정상적인 정당기능과 관련된 기구(당대회/중앙위원회/정치국)는 존치하되 당·국가체제 유지의 핵심기구인 비서국 및 조직지도부, 중앙군사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기구 설치를 무력화해야 함.
  - 중앙·지방 국가관료기구, 군 및 공안조직, 사회·근로단체, 공장·농장·기업소에 조직되어 있는 당위원회 및 관련 집행조직을 전부 해체하고 유사기구 설치를 불법화해야 함.
  - 독재체제를 뒷받침한 각종 경찰·공안조직<sup>9</sup>과 관변언론<sup>10</sup>을 즉각 접수하여 민주화와 통일을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전면개혁 필요
  
- 김일성 가계 및 노동당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국고환수 추진
  - 수령경제(김정은 통치자금 및 김일성 가계의 보유재산) 및 당경제(당 운영비 조달 관련)는 북한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방대한

<sup>9</sup> 민간단위에서는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성, 군내부에는 호위사령부와 보위사령부 등이 있음.

<sup>10</sup> 노동신문(노동당 기관지), 민주조선(내각 기관지), 청년보(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 군보(조선인민군 기관지), 조선중앙통신(통신사), 조선중앙TV·평양방송 등 각종 방송망.



것으로 추정<sup>11</sup>

- 수령경제와 당경제는 노동당 39호실에서 총괄운영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각종 은닉재산, 해외도피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sup>12</sup>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조직적인 재산은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북한 지역에 다원적 정당체제가 수립되도록 지원

- 조선노동당의 특권 및 공안독재기구의 해체 이후 기존 정당·단체를 개혁하거나 새로운 정당·단체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기존 위성정당들<sup>13</sup> 및 신생정당들이 체제를 정비하고 새지도층을 충원하며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적·제도적·재정적인 지원 필요
- 북한 지역에서는 민주정당 운영경험이 없으므로 남한 정당들의 자문이 요구되며 정부에서도 노동당 견제, 신생정당에 대한 국고지원 등을 통해 신생정당들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구성

- 북한 민주화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통일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인 상하원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실질적 권력을 가진 하원과 상징성만을 가진 상원을 구성

<sup>11</sup> 여타 30%는 군수경제, 나머지 40%는 인민경제(내각경제 및 시장경제)가 차지. 다만 이러한 비중은 추정치일 뿐이며, 정확한 비중과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일 후 실사작업이 필요.

<sup>12</sup> 과거 김정일은 해외 불법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세탁하여 스위스, 마카오 등의 비밀계좌에 은닉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sup>13</sup> 조선천도교청우당, 조선사회민주당 등.

- 내각은 기본적으로 하원 의석수와 연정구성 상황을 반영하여 구성하고 상원에서는 상징적 존재인 대통령을 선출하여 대외적으로 통일한 국을 대표하도록 배치
  - 하원은 남북한의 민·형사법, 행정법, 국가보안법 등의 분단을 전제로 형성된 법률을 ‘(가칭)통일법제 제정 특별위원회’를 통해 조속히 제·개정 필요
- 통일한국의 안보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다자간 기구 형성 추진
- 북핵협상을 위한 6자회담을 발전시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연계하여 동북아 다자안보기구를 발족시킴.
  - 쌍무적, 다자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통화스와프 확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다자화기금(CMIM)의 확대·개편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경제공동체 형성 추진
- 북핵관련 시설의 폐기 유도
-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CTR-nk Program)’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북핵관련 시설들의 폐기를 완료함.
  - 핵폐기 단계에 필요한 물적·인적 지원을 하는 넌-루가(Nunn-Lugar) 프로그램에 따라 북한의 핵과학자, 기술자에 대해 재교육을 통한 직업 전환을 유도함.
  - 영변지역 내 핵연료제조공장, 원자로, 사용 후 연료봉 보관시설, 방사화학실험실 및 우라늄농축시설을 모두 해체하고 핵제조 관련시설 내부에 잔류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제염작업을 완료함.



## (나) 파급효과

- 분단해소단계에서 이루어진 북한 개혁정부의 타협적 민주화로 인해 정치·경제개혁의 왜곡과 지체 현상 발생
  - 북한의 개혁정부 주도하에 민주화가 진행되어 민주화의 과정에서 기득권층과의 타협적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큼.
  - 기득권층을 철저히 배제한 민주화는 조직적 반발을 불러 반동 역류를 초래할 가능성과 제도적 청산이 지체되거나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구기득권층이 여전히 북한 지역의 지배세력으로 존속할 위험이 존재함.
  - 북한의 로열패밀리를 비롯한 기득권층이 ‘붉은 자본가’(Red Capitalist)로 변신하여 본격적 사유화와 시장화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존재함.
  
- 정당 난립과 시민사회의 인위적 동원에 따라 정치적, 이념적 갈등의 사회적 위험 발생
  - 통일한국에서는 북한 지역 시민사회가 채 등장하기 전에 정치세력이 사회를 동원하면서 사회균열을 인위적으로 조장할 가능성이 큼.
  - 시민사회와 정치사회가 조응하지 못하고 시민사회 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격변기의 사회적 혼란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존재함.

## (다) 연계조치

- 북한 기득권층에 대한 선별적으로 유인책 제공
  - 중하층 관료들에게 직업전환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주화의



지지기반으로 삼고 기득권층을 고립시키는 방안 고려

- 실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야전군인들에게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민주화 과정을 지지 혹은 최소한 묵인하도록 유도하여 노동당과 연계된 정치군인들을 고립시키는 방안 고려

- 북한 주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분출시켜 기득권층의 저항을 막아야 함.
  - 대중적 시위 등을 통해 민주화 과정에서 북한의 민주 정치세력에게 협상력을 제공하여 기득권층의 정치적 야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압력을 가해야 함.
- 북한 지역 시민사회를 조기에 발전시킬 수 있는 장치 고안 필요
  - 남한 지역 시민단체 주도로 북한 지역에 계층별, 직업별, 종교별, 기능별 전국적 시민단체 형성을 가속화하는 방안 고려
  - 정부는 남북통합에 기여하는 시민단체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행정 서비스 제공

### (3) 기대상황

- 기본적인 제도통합의 완료를 통한 북한 지역의 민주주의 이행 기대
  - 북한 지역의 민주주의이행과 한반도 전역에 자유민주주의적 질서 확립
  - '(가칭)통일추진위원회'가 해체되고 자유총선거에 의해 국민들을 대표하는 통일정부 구성



- 정치사회적 불안정 지속 요인 고려
  - 정당난립, 북한 지역 기득권층의 반발, 민주화 시위가 지속되는 등 정치사회적 불안정 요인 고려
  
- 동북아 지역안보협력체 및 지역경제공동체 형성 기대
  - 동북아 차원에서 미·중관계 및 지역차원의 이해관계가 평화적으로 관리되는 상황 기대
  
- 북한 지역의 모든 핵시설이 폐기되는 등 한반도 비핵화 과정 완료 기대
  - 북한 핵문제의 해소로 통일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권 신장 가능

## 나. 경제분야

### (1) 목표설정

- 북한 지역의 거시경제안정화, 자유화 및 실질적 사유화 완성
- 북한 지역의 경제 재건과 경제제도의 통합 및 기업의 생산능력 확충

### (2) 수행과제

#### (가) 핵심과제 도출

- 체제통합단계 초기의 과도한 통일비용과 일시적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

- 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 시행
  - 통일한국경제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홍보 전략 수립
  -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Flexible Credit Line)와 세계은행의 IBRD 자금지원을 활용 계획에 따른 추가적인 외화유동성 확보에 주력
  -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한도 확대 시도
  - 북한의 국내외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승계 원칙 표명 필요

- 북한 지역의 거시경제 안정화 및 가격자유화 지속 시행
  - 체제통합단계에서 통일한국 정부가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함에 따라 거시경제 불안정 요인은 감소할 개연성이 크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한 대비 필요
  - 화폐통합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북한 지역에서 가격자유화 진행
  - 북한 지역의 공공가격체계는 남한 지역보다 낮게 책정하되 그 가격체계는 남한 지역의 상대가격 체계로 전면 개편
  - 북한 지역 공공가격체계를 남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정부 보조금 지급 필요

- 북한의 인구, 경제, 사회, 복지, 재정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북한의 국가보유 자산(기업, 토지, 농지, 주택 등)의 전면적 실태 조사 필요

- 북한의 모든 국유자산은 통일한국이 인수하고 '가칭'국유자산관리청을 설치해 국유자산의 사유화(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시행



- 북한의 기업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유자산은 통일한국 정부가 그 소유권을 인수하여 행사
  - 북한 주민의 토지, 주택 등 통일이전 북한 지역에서 실제로 인정되고 있던 개인 소유권은 보호 및 인정
  - 분단 이전 북한 지역의 원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호하되 통일한국 정부가 이를 적정하게 보상하는 원칙으로 유연하게 대처
  - ‘(가칭)국유재산관리청’은 국유자산 중 사유화 형태, 과정, 기준 등을 선정하고 계속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대상의 관리 방안 마련
- 국가보유 자산의 민영화 원칙 제시
- 농지는 남한의 농지개혁 전례에 따라 농민에게 무상분배(또는 장기 무상임대)
  - 주택은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나 북한 주민에게는 장기 무상 임대
  - 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며 토지 일부는 북한 지역의 공공개발을 위해 국가가 공급
  - 국유기업의 경우 민영화 원칙에 따라 소규모 상점, 소규모 기업소는 실태 파악 후 신속하게 매각, 청산
  - 대규모 기업소, 연합기업소, 군수공장, 광산 등은 실태조사와 가치 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에 서둘러 매각하기보다는 체제통합과정에서 단계적 매각이 바람직함.
- 북한경제 재건계획 보완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 체제통합단계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통일 이전에 수립된 북

한경제 재건계획 보완 필요

- 북한경제 재건 및 SOC 확충 사업의 성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민간 투자와 정부재정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익성 있는 SOC 사업은 민간이 투자하고 수익성은 없으나 경제성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적절한 보증으로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성화 유도
- 북한 지역에 대한 중요 SOC 확충 사업에 국내외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계은행,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아시아개발은행의 참여 유도

○ 남북한 경제제도의 통합과 관련된 교육 실시

- 남북한 경제제도의 성공적인 통합은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의 교육훈련에 성패가 달려 있음.
- 북한 지역 제도의 운영 수요는 대부분 체제통합단계 초기에 남한에 의해서 공여된 북한 주민에 대한 일정한 직업교육(On-the-job training)을 통하여 충당될 것임.

○ 북한기업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북한 지역에 신생기업 창립 유도 구조 마련 및 임금보조금 지급

- 북한 국유기업의 상당부분은 시설이 노후하고 비효율적이기에 북한 지역 전체를 일종의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내외국인 신생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제공하는 방안 고려
- 북한 주민을 고용한 북한 지역 기업에는 적절한 임금보조금 지급으로



북한 지역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화폐통합으로 인한 북한 기업의 생산성 하락 방지

- 임금보조금은 북한 지역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는 폭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을 구별해낼 수 있는 체제통합단계 초기의 효율적인 제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나) 파급효과

- 북한 국유자산의 사유화, 민영화는 체제통합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분야 조치임.
- 통일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이며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재원이전이 필요함.
  -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은 남한 지역으로 이주할 유인을 가지게 되며 남한 지역 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 주민이 남한 지역으로 대량 이주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체제통합단계의 정치, 사회분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북한 주민이 북한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주택, 농지 등의 장기 무상대여 또는 양허적 사용권(공공임대제도)을 북한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여하여 실질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다) 연계조치

- 북한 지역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구축은 통일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북한 국유재산 처리와 연계되어야 함.
- 북한 기업의 민영화 조치는 일반적으로 실업자의 급증을 초래하게 되므로 민영화의 규모와 속도는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의 확대와 연계되어야 함.
  - 독일 통일 초기의 신속한 대규모 민영화와 실업의 급증이 동독 지역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한 대표적인 요인임에 유의해야 함.

### (3) 기대상황

- 북한 지역의 시장경제 제도통합과 실질적인 사유화 완성 기대
  - 체제통합단계 시작 시 북한 지역에서 거시경제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통일 정부의 적극적인 물량 공급과 공공가격 안정정책으로 해소 가능
  - 북한 지역의 계획경제의 해체와 가격자유화를 통해 시장경제제도가 정착
- 북한경제 재건과 북한 지역 기업의 생산능력이 통일 직후에 비해 확충된 상황 기대
  - 북한경제 재건계획에 따라 통일정부는 주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 등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고 추가적인 인프라의 건설을 위해 북한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정책 시행
- 북한 지역에 임금보조금을 지급하여 북한 지역 기존기업과 신생기업의 생산능력 확충 기대

## 다. 사회분야

### (1) 목표설정

- 남북한 다원적 시민사회와 단일한 전국적 시민단체의 형성
  - 체제통합단계에서 남북한 시민단체의 자발적 통합 유도
  - 남북한 지역에 기반한 시민단체는 통일국가의 주체로서 활동
  - 다원화된 시민사회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 한국인'의 가치관 형성 유도
- 남북한 복지제도의 통합과 한시적 복지제도 분리 운영
  - 남북한 복지 제도 통합하되 복지 재원의 한계 및 지역적 차이 등으로 남북한의 복지 제도의 한시적 분리 운영이 필요
  - 한시적 복지제도 분리운영은 북한 주민이 남한 지역으로의 대규모 이동을 일정하게 억제하는 역할
- 남북한 인구 이동의 안정화
  - 북한 지역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적 이동을 일정정도 억제
  - 인구 이동의 안정화는 곧 사회적인 안정화와 안정적인 시민사회의 활동을 보장함.



## (2) 수행과제

### (가) 핵심과제 도출

- 북한 주민의 재사회화와 학교 교육의 통합
  -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통합에 필요한 재사회 교육 필요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 남북한 학교 교육의 통합과 새로운 교과서 마련
  
- 문화적 동질성 구축을 위한 통일문화의 확산과 적극적인 통합 프로그램 운영
  -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전국적, 지역적, 세대별로 차별화하여 프로그램 운영
  - 체육, 문화 등의 단일 대표팀 구성과 미디어의 역할 강화 필요
  
- 단일한 전국적 시민단체의 구성과 통합
  - 지역별 시민단체의 독자적 운영의 인정과 동일 시민단체의 자발적 통합 독려 및 지원
  
- 북한 지역 인구이동 방지를 위한 실질 소득의 안정화와 노동시장의 통합
  - 재교육을 통한 취업 및 실업률의 안정적 관리 필요
  - 노동시장의 통합과 지역적 불평등의 관리 필요



## (나) 파급효과

- 소득의 안정화 및 실업 등의 관리를 통해 북한 주민의 통일 후유증 최소화 및 북한 주민의 심리적 안정화 효과
  - 재교육을 통한 북한 주민의 자신감 고취와 과거 회귀적 심리의 재부상 방지
  
- 북한 주민 재교육을 통한 자유주의적 가치관 형성 및 확산 효과
  - 통일 한국의 이데올로기적 분열의 방지와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 및 관리
  
- '통일 담론' 및 '통일 한국인' 정체성 형성과 강화
  - '통일한국인'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적 차별의 최소화
  -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의 예방
  
- 새로운 체제 부적응자에 대한 관리
  - 세대별 교육 효과의 차이 및 관리 대상을 선별하여 정치·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한 재평가 및 재교육 실시
  - 실업, 재취업교육, 연금지급, 복지수요 증가 등의 문제 발생

## (다) 연계조치

- 북한 지역에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 필요
  - 실질 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와 북한 지역의 경제재건 및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지원 지속

- 정치 과정에서의 지역적 차별구도의 최소화 방안
  - 지역 차별적 정책과 선거 전략을 방지하여 정치권력의 극심한 불평등 분배를 예방해야 함.

### (3) 기대상황

- 다원적 시민사회의 형성과 안정화 기대
  - 전국적 차원에서의 시민사회 활성화 및 전국적 시민단체의 형성
  - 전국 규모의 시민단체와 지역 기반의 시민단체의 공존
  - 다원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가치관의 사회적 확산
  
- '통일 한국인'의 가치관은 형성되었으나 지역 간 차별, 역차별 존재 상황 고려
  - '통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지만 일정한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
  
- 체제통합에 따른 북한 주민의 인구 이동 방지와 이주율의 안정화 기대
  - 남북한의 인구 이동이 안정화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적 안정화에 기여
  - 북한 지역에서의 소득 창출 및 북한 지역의 소득수준 간 비율의 수렴 가능



## 라. 종합적 기대상황

- 체제통합단계에서는 경제분야의 통합이 가장 핵심과제로서 북한 지역에서 계획경제체제가 해체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완료하여 남북한 지역 단일시장경제권 형성 기대
- 정치적으로 제도통합과 다원적 시민사회가 형성되었으나 여전히 남북한 지역 간 차별, 역차별 의식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
  - 정치사회적으로 정당난립, 기득권층의 반발 등의 불안정 요인 고려
- 북한 경제재건과 북한 지역기업의 생산능력이 확충됨.
- 동북아 지역안보협력체와 지역경제공동체 등 지역차원의 이해관계가 평화적으로 관리되는 상황 기대
- 북한 지역의 모든 핵시설 폐기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과정 완료 기대
- 다원적 시민사회의 형성과 안정화로 다원주의와 자유주의적 가치관 확산 기대
  - 남북한의 인구 이동 안정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 기여

### 3 국가완성단계

#### 가. 정치분야

##### (1) 목표설정

-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정치행정체계 수립 및 정착
  - 남북한 지역 정당통합을 통해 정당난립을 해소하고 전국정당에 기반한 온건 다당제를 정착
  - 전국차원에서 효율적인 통합 행정·사법체계를 수립 및 지방선거제도 도입 등 북한 지역 민주주의 공고화
  
- 국제적인 평화국가 역할 수행
  - 평화유지군, 재건안정팀 파견 등 평화 국가의 역할 수행

##### (2) 수행과제

###### (가) 핵심과제 도출

- 남북한 정당통합 및 온건다당제 유도
  - 사회경제적 통합의 속도에 맞춰 남북한 정당통합을 의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동독 지역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4개월 만에 무려 23개 정당이 형성되었으나 합당 및 동서독 정당통합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7개 정



- 당만이 통일독일 원내에 진출하면서 생존한 사례 있음.<sup>14</sup>
- 남한정당들이 북한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거나 북한 지역 정당과 각급 조직과 협력망을 구축하고 인적 교류, 재정지원, 정치자문, 연수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정당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sup>15</sup>
  - 의원내각제에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안정적이거나 이념적 좌우 극단정당들이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거나 원내정당이 지나치게 많아 정치상황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한 극단적 다당제의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온건 다당제를 유도할 필요<sup>16</sup>
- 효율적인 통합 행정사법체계 구축
- 체제통합단계까지는 기득권층의 민주화와 통합에 초점을 두었다면 국가완성단계에서는 국가 기본인프라인 행정·사법체계의 통합과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야 함.
  - 통일 초기에는 북한 지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한 광역행정 단위를 그대로 두거나 인위적으로 동수로 조정해야하나<sup>17</sup> 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인구비례에 기초해 북한 지역 행정단위를 축소하고 필요한 경우 남북한 접경지역을 통합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성 도모
  - 북한 지역의 기존 사법시스템을 부분 개혁하고 사법 인력을 파견, 양

<sup>14</sup> 동서독 정당의 통합에 대해서는 송태수, “1989/90년 격변기 동독 내 서독 정당의 전략과 정책,” (FES-Information-Series 2006-01, 2006.1).

<sup>15</sup>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158~159.

<sup>16</sup> Giovanni Satori,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p. 171~193.

<sup>17</sup> 앞서 분단해소단계 상원제도 참조.

성하여 남한의 시스템을 기반한 통합 사법시스템 구축<sup>18</sup>

- 북한 지역 공무원들이 새로운 행정사법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교육 실시와 남한 지역 공무원도 통일 행정사법 교육 실시

○ 북한 지역 지방선거제도 도입 등 민주주의 공고화 방안 마련

- 북한 지역에서 민주화가 진척됨에 따라 제반 제도를 보완하고 비민주적 관행을 제거할 필요
- 북한 주민에 대해 민주적 정치교육 및 시민사회 소양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민주주의 공고화 추진
- 지방의 주요문제에 대해 주민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제, 지방단체장 및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 등을 점진적으로 도입 검토

○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외교적 영향력 강화

-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저개발국가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평화선도국 위상 정립
- 실패국가의 재건, 안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국가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 및 구축에 기여함.

<sup>18</sup> 북한의 사법체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재판부-검찰-변호사로 구성되며, 법원/검찰의 경우에도 한국과 유사하게 중앙재판소/중앙검찰소(대법원/대검찰청에 해당) → 도·직할시재판소/도·직할시검찰소(고등법원/고등검찰청에 해당) → 인민재판소/시·군·구역검찰소(지방법원/지방검찰청에 해당)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반면 3심제가 아닌 2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1심에서는 직업판사 1명과 함께 일반참심원 2명이 재판을 주재한다는 점(2심에서는 직업판사 3명이 재판을 주재), 그리고 검찰이 수사와 공소유지만이 아니라 한국 감사원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점이 차이임. 이효원,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방안,” 『법학연구』, 제51권 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pp. 67~104.



- 동북아 안보환경 안정화 추진
  - 동북아 다자안보기구를 이용하여 역내 군비통제 협상 주도
  - 지역 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재래식 군사력을 적정 규모로 감축하여 지역 내 긴장 완화 방안 마련

### (나) 파급효과

- 사회경제적 통합의 심화에 따른 법규 재개정 수요 발생
  - 사회경제적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분단해소, 체제통합단계에서 남북한 지역균형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마련되었던 제도들에 대한 재개정 필요
- 북한 지역 민주화 및 남북한 사회경제통합 진전으로 추가적인 재정적, 사회적 부담 발생
  - 북한 지역 공무원이 대거 퇴출됨에 따라 재교육 및 재취업 기회보장, 각종 복지수요 충족에 필요한 예산 증대 필요
  - 남북한 소득격차, 생활수준 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북한 주민의 정치적 요구 분출 가능
  -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정치권에서 과도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면 재정부담 증가로 인한 남북한 지역 주민 간 갈등 초래 가능
- 유엔평화구축위원회(UNPC)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부담 증가 초래
  - 국제사회 주도적 역할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및 재정부담



등으로 국내 부정적 여론의 대두 가능성도 존재

### (다) 연계조치

- 점진적으로 헌법개정 추진 필요
  - 통일 이후 상당기간 개헌문제가 주기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사회경제적 통합의 진전 정도, 남북한 주민 간 이념적·의식적 동질화 정도, 제도개정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진적인 헌법개정 추진
- 남북한 지역 사회협약 체결
  - 남북한 시민사회의 성숙을 전제로 북한 지역 주민의 생산성 증대와 남한 지역 주민의 세금부담 증가를 맞교환하는 사회협약 체결 필요

### (3) 기대상황

- 통일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내면화 기대
  - 다양한 정치이념의 공존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 가능
  - 한국전쟁, 남북한 정부의 성격, 역사문제 등에 대해 남북한 지역 간 인식격차 해소 기대
- 실질적 통합이 완성되고 통일의 역전가능성 소멸 기대
  - 북한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어 구체제인사들에 의한 통일역전의 위험 상황이 사라짐.



- 국제무대에서 통일한국의 위상 향상 및 안보적 자주성 제고
  -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및 안보부문에서 통합의 가교역할을 수행
  - 국제적 평화선도국가 위상 마련

## 나. 경제분야

### (1) 목표설정

- 북한 지역 경제의 자생적 성장능력 구축
- 북한 지역 인프라의 지속적인 건설
- 남북 지역 간 실질적 경제통합 달성

### (2) 수행과제

#### (가) 핵심과제 도출

- 국가완성단계에서 북한 지역의 자생적 경제능력을 구축하여 성장 유도
  - 북한 지역에 부여된 각종 특혜 조치에 대한 단계적 철회 필요
  - 북한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적 특혜없이 자생적 성장능력을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함.

- 남북한 균형적 발전을 위한 북한 지역 인프라의 지속적 건설 필요
  - 남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택, 병원, 학교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속적 인프라 건설
  - 정부보다 민간이 건설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정부 보증보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sup>19</sup> 방식이 주축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남북 간 이질적 경제체제에 대한 실질적 경제통합 완성을 위한 정책 마련
  - 남북 간 이질적인 경제체제는 대부분 남한 선도형의 통일유형에 의해 체제전환 될 것임.
  - 정상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토지제도 등 실질적 제도통합 정책에 집중해야함.

### (나) 파급효과

- 북한 지역의 경제성장과 인프라 구축으로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
  
- 북한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자유화의 신장에 따른 경제정의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의 형성 촉진

<sup>19</sup>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고 실패위험이 큰 유전·탄광·조선·발전소 등의 사업에 대해 신용도나 담보 대신 사업계획, 수익성 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을 말함.



### (다) 연계조치

- 북한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외계층의 불평등 문제 해소 필요
  - 경제성장의 성과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북한 지역의 취약계층과 신흥 기업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연계 필요

### (3) 기대상황

- 남북 간 경제제도의 실질적 통합 및 운용에 따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가능
  - 체제통합단계에서는 통합된 경제제도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제도통합을 위한 교육 등 부대비용 발생하는 반면에 국가 완성단계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불필요해짐.
  - 실질적인 경제통합과 소득 분배의 효과성 증대에 따른 경제적 소득의 안정화와 실업률 감소 등 지속적 경제성장 기대
- 남북한 지역 간 이주율의 안정화로 인한 균형발전 기대
  - 거주지역 선호를 나타내는 자국편의(Home Bias) 증대가 인구이동에 따른 순편익을 능가하는 경우 이주율 안정화로 나타남.
  - 남북한 지역 간 인구 이동 요인의 감소로 정상국가로의 진입을 기대

## 다. 사회분야

### (1) 목표설정

- 통일한국의 사회적 규범의 내면화 형성
  - 비가역적 통일담론이 형성되어 '분단 담론' 혹은 '분단 회귀'의 관념을 사회적 일탈로 규정함.
  - 일부 저항문화를 하위문화로 포용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
  - 사회적 규범의 내면화에 따른 통일 국가에서 일상적 삶을 누림.

### (2) 수행과제

#### (가) 핵심과제 도출

- 남북한의 이질적 복지제도에 대한 실질적 통합 구축
  - 복지제도의 한시적 분리운영을 마무리하고 남북한 간 동일책임, 동일혜택의 원칙 실현
  - 복지제도의 실질적 통합에 따라 복지생활과 문화생활에서 남북 지역 간 균형을 이룸.
  
- 분단담론을 사회적 일탈로 규정하여 통일한국의 정당성 확보
  - 남북한 대결적인 분단담론에서 벗어나 통일한국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하위문화를 포용하는 지배담론 형성



- 남북한 간 하나의 생활문화권 체계 형성
  - 하나의 법과 제도가 일상화에 따른 단일생활문화권 형성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와 문화생활 확대 강화

### (나) 파급효과

- 통일한국의 가치관 형성과 다양한 가치관 공존 효과
  -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적 가치관의 일상화 확립
-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정착

### (다) 연계조치

- 자유 민주주의, 평화, 복지 등 통일 사회의 정치적 이념을 합의 필요
  - 정치적 자본 분배의 균등성 확보하며 선거 등 일상적 정치행위가 가능한 정치 구조를 형성함.
- 남북한 간 고른 소득 수준 형성을 위한 정책 마련
  -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을 고르게 분배함으로써 경제적 안정화를 추구하고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향상시킴.

### (3) 기대상황

- 다원적 시민사회 형성으로 분단담론이 소멸되어 통일한국의 규범에 대한 내면화 및 일상화
  - 점차적으로 분단의 사회적 흔적이 소멸되어 '재분단'의 위험성이 사라지고, '하나의 사회'로 통합이 완결됨.
-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공존과 일상적 문화행위의 제도화 형성
  - 저항문화를 하위문화로 포용하여 사회 갈등 요소에 대한 관리 및 제도화 기대

### 라. 종합적 기대상황

-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통일한국의 가치와 제도가 일상화되어 하나의 생활문화권 형성
  - 통일국가로의 정치적 이념이 합의되고, 경제적 안정화 및 통일 사회의 가치관 형성으로 지역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적 차별이 소멸됨.
  - 다원주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단일생활문화가 형성됨.
  - 다원적 시민사회 형성과 점차적인 분단담론의 소멸로 통일한국의 규범에 대한 내면화 및 일상화가 형성됨.
-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립 및 공고화에 따른 제도화된 정치생활의 확립
  - 전국적인 정치행정체계의 완성과 단일한 정치제도의 공고화 및 선진



## 화 구축

- 선거의 제도화 및 일 다당경쟁 구도의 정착 등 정치의 선진화를 이룸.
  
- 북한 지역 경제재건과 자생력 확보로 남북동반 균형 성장 기대
  - 북한 지역의 지속적 인프라 건설과 성장 동력의 극대화로 남북 간 실질적 경제통합을 이룩함.
  - 북한 지역의 실업문제 해결, 소득분배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
  
- 격상된 통일한국의 위상과 안보적 자주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의 역할 증대
  - 통일한국의 모범적 발전국가 모델 구축과 공공외교 강화에 따른 국제적 위상 제고



##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 VI. 정책제안 및 고려사항

## 1 정책제안

### 가. 선도형 통일 추진 원칙 마련

- 선도형 통일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주안점을 ①포괄성, ②연계성, ③점증성의 3대 원칙 하에 추진 방향 설정 필요
- 첫째, 한반도 통일의 문제는 한민족의 삶의 터전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대변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계획의 포괄성이 담보되어야 함.
- 둘째, 정치·경제·사회분야별 과제의 실천과 함께 수행과정에서 정책과제 간 파급효과에 따른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셋째, 통일정책 추진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관성 결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추진한 정책의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점증적 방식이 정착되어야 함.

### 나. 선도형 통일에 대한 남한 사회의 국민합의 조성

- 선도형 통일은 남한 주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 하에 마련된 것이므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정책 발굴 필요
  - 통일에 대한 전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남한 국민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우선적으로 불식시켜야 함.



- 남한사회의 통일에 대한 부담감은 다소 과도하게 인식되고 있는 통일비용과 연관되어 있기에 선도형 통일에서는 통일비용이 남한의 경제력을 초과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홍보할 필요
  - 통일비용은 남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지출되어야 하며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과도한 재정소요는 통일과정의 소요 시간을 늘리는 정책적 방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함.

#### **다. 선도형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 한반도 통일이 모범적 국가건설의 연장선에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
  -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 정착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사실상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통일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모범적 발전상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을 홍보해야 함.
  - 통일한국이 역내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주변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선도형 통일과정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해 한국 공공외교의 확대 필요
  - 한국의 격상된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국에 대한 통일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라. 북한의 정상국가 변화유도

- 북한을 정상국가로의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난 해소와 독재정권 타파 필요
  -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함.
  - 북한 독재정권을 민주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유도하여 동북아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는 호전적 인상을 해소시켜야 함.
  
- 북한이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남한 및 국제사회의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2 / 고려사항

- 선도형 통일에서는 지향해야 하는 사안과 지양해야 하는 사안을 고려하여 통일정책을 마련해야 함.
  
- 통일정책의 추진관련 지향해야 하는 것은 ①국가역량 강화, ②국민합의 도출, ③종합적 추진체계 마련의 3대 방식임.
  - 통일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국가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역량강화는 통일과제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됨.
  - 국민합의 도출은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의 과제가 전 국민의 합의를



- 통해 수행될 때 효과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통일은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전 국민의 노력이 결집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거버넌스 개념에 입각한 종합적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
- 통일정책의 추진관련 지향해야 하는 것은 ①당위성 통일 강조, ②불필요한 북한 자극, ③과도한 자신감 표출의 3대 방식임.
- 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당위성에 기반한 통일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통일이 국가발전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북한에 원칙적 통일정책을 추진하되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바, 통일한국의 위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홍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사안이며 통일한국이 주변국에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 부록: 독일통일 사례



## I. 총론

○ 독일 통일과정의 단계를 통일준비시기, 분단해소단계, 체제통합단계, 국가완성단계, 정상국가 운영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 각 단계별 특징

단계	시기	특징
통일준비	1989년 여름 ~ 1989.12.	서독이 통일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
분단해소단계	1989.12 ~ 1990.10	통일독일의 국가운영에 관한 합의 도출 정치의 역할이 중심
체제통합단계	1990.10 ~ 1995	법적·제도적 통합 완료, 내적 통합 준비 경제적 통합이 중심
국가완성단계	1996 ~ 2005	잠재적 통일위기의 성공적 관리 사회적 통합이 중심
정상국가	2005 ~	통일 불가역성 성취

## II. 통일 준비시기(1989 여름~1989.12)

### 1. 특징

○ 동독내부의 변화(시민사회 태동, 정권 교체), 국제환경(동구권의 연쇄붕괴와 개혁 분위기 형성, 4전승국의 입장변화), 서독의 확고한 위상(경제적 성공, 국제정치적으로 견고한 위상)에 힘입어 서독 정부가 향후 통일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함.

- 동독 내부에서 시민사회가 태동하여 민주화를 요구하고 개혁 성향의 정권이 수립됨.
- 국제정치적으로 전승 4국이 독일통일 반대에서 통일 지지로 입장이 선회되는 분위기가 형성됨.
- 서독 정부는 통일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조속한 통일로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은 상태였음.

## 2. 분야별 상황전개

### 가. 정치: 동독에 개혁성향의 정권 등장

- 개혁성향의 정권 등장
  - 동독 내부의 격변에 대하여 체제고수와 개혁의 갈림길에서 개혁으로 방향을 잡음.
  - 사회주의 통일당 정치국 호네커 퇴진을 결정(10.10~11)
  - 인민의회, 크렌츠를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10.24)
  - 모드로우 총리가 취임(11.13)

### 나. 국제환경: 통일반대에서 지지로 분위기 반전

- 전승 4국 독일통일에 거부감 표시
  - 대처 영국 총리, 부시와의 회담에서 통일 논의가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11.17)

- 몰타 미·소 정담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2개의 독일 존속을 주장 (12.2)
- 고르바초프와 미테랑은 독일의 단독행동을 경고(12.6)
- 전승 4국 독일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 형성
  - 미테랑, 독일통일은 헬싱키 최종선언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 (12.9)
  - 고르바초프,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내 사태에 불개입을 선언 (12.10)
  - 베이커 국무장관 서독방문, NATO와 EC 잔류 전제로 독일통일을 지지(12.12~13)

#### **다. 경제: 동독경제의 부실 현실화**

- 동독경제는 사회주의 경제 중에서 양호한 편에 속했으나 사회주의 경제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이 나타남.
  - 외연적 성장전략의 한계
  - 만성적 물자부족
  - 위장실업

#### **라. 사회: 시민사회의 태동**

- 동독 주민의 대량이탈
  - 1월~10월까지 약 16만 7천여 명이 서독으로 이탈

- 베를린 장벽이 붕괴(11.9)된 11월 한 달 동안에만 13만 명이 이주
- 시민사회가 태동하여 정치개혁을 요구
  - 월요시위(Montagsdemonstration) 확산
  - 우리가 민중이다 “*Wir sind das Volk*”를 외치며 정치개혁 요구
  - 정치세력화: 신광장(Neues Forum, 9.10), 즉각 민주주의당(Demokratie Jetzt, 9.12), 민주주의 출발당(Demokratischer Aufbruch, 9.14), 동독 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in der DDR, 10.7), 동독 녹색당(Grüne Partei in der DDR, 11.5)

#### 마. 동서독 정부의 입장: 통일 신중론

- 서독정부는 조속한 통일이 아니라 점진적 통일로 입장 정리
  - 동독 지도부에 국가, 경제,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11.11)
  - 콜 총리, “독일과 유럽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 계획” 발표(11.28)
- 동독정부는 조약공동체 등 조속한 통일에 신중한 입장 견지
  - 모드로우, 조약공동체 구성 제의(11.13)
- 동서독 간 조약공동체 구성 합의
  - 콜과 모드로우, 드레스덴에서 조약공동체 구성 합의(12.19)

### 3. 서독의 주도권 확보

#### 가. 주도권 개념

- 주도권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문제로서, “상대방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 또는 가능성”(M. Weber)으로 개념화 함.
- 통일준비시기는 서독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던 시기이며 실제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체로 신중했음.

#### 나. 주도권 확보의 요인들

- 서독이 대동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동독요인, 국제환경요인, 그리고 서독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음.
- 동독요인: 동독의 위기와 개혁적 접근
  - 동독 주민의 대량이탈, 민주화 요구 등 동독이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이 동독의 정치적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서독의 주도권 형성에 기반을 마련했음.
  - 또한, 동독 정권이 체제유지에 집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개혁성향의 정권으로 변화했다는 점이 중요함.

- 국제환경요인: 동구권의 연쇄 붕괴
  - 1989년 동구권의 연쇄적인 붕괴로 동독은 동구권에서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고 또한, 당시 동구권은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점도 일정하게 작용했음.
  - 독일문제에 대한 4전승국의 태도변화가 본질적인 변수였으며 2차대전 전의 산물인 동서독 분단을 해소하는 데에는 분할점령 4전승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는데 주요 당사국이 초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1989년 12월을 즈음해 입장이 선화하게 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함.
  
- 서독요인: 우수한 사회경제적 성과와 능숙한 외교
  - 1980년대 후반까지 독일 경제의 성과가 매우 우수했으며 2차대전 이후 사회적 시장경제로 대변되는 서독의 사회경제 체제가 성장률, 수출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뿐만 아니라 노동 및 복지 차원에서도 성적이 양호했으며 이것이 서독에게는 자신감으로, 동독에게는 부러움의 원천으로 작용했음.
  - 국제정치 환경과 동독의 입장을 신중하게 고려한 서독의 접근이 주도권 확보의 하나의 요인이었음. 콜은 독일문제가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했고 동독 수뇌부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개혁을 요구하는 양면정책을 구사했으며 이는 통일 준비시기의 주요 모멘텀이 ‘서독발’이 아니라 ‘동독발’이었음을 감안하면 깊이있게 고려해야 할 사안임.

### Ⅲ. 분단해소단계(1989.12~1990.10.3)

#### 1. 특징

- 통일준비시기에 확보된 서독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동서독 정부 사이의 협상에 의해 통일독일의 국가운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분단상태가 해소되고 통일독일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시기임.
- 동독 내부에서는 시민사회가 통일을 요구하고 개혁성향의 정권이 정치 개혁에 착수하면서 자유선거 등 일련의 개혁조치가 단행되어 친기민당 계열인 독일동맹이 다수를 점함으로써 통일 이외 다른 대안이 사실상 사라짐.
- 국제정치적으로 전승 4국이 통일 지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독일통일을 승인함.
- 서독 정부는 통일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에서 화폐통합을 필두로 조속한 통일로 입장을 정함.
- 양독 정부는 기본법 23조에 의한 통일에 합의하고 향후 통일독일의 국가운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
- 정치, 경제, 사회 가운데 양독관계 및 국제관계에서 정치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던 시기임.

## 2. 분야별 상황전개

### 가. 정치: 개혁 불가피론의 확산과 서독과의 협상을 통한 개혁방향 정립

- 주요 정치행위자가 체제고수가 아니라 개혁을 기정사실화
  - 동독 기민당 임시 전당대회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 수용(12.16)
  - 친 기민당 성향의 동독 기민당, 독일사회연합당, 민주주의 출발당이 “독일동맹” 구성(2.5)
  - 동독 인민의회 선거(3.18)에서 독일동맹이 48% 득표

〈표〉 동독 인민의회 선거 결과(1990년 3월 18일)

(단위: %)

주	독일동맹				자유 민주주의 연맹	사민당	녹색당	연대 90	민사당	기타
	기민당	민주주의 출발당	독일 사회동맹	소계						
메클렌부르크	36.4	0.6	2.3	39.3	3.6	23.9	2.0	2.3	22.4	6.4
브란덴부르크	34.0	0.8	3.7	38.5	4.8	28.9	2.1	3.3	18.4	40.0
작센안할트	44.7	0.6	2.4	47.8	7.7	23.6	1.8	2.2	14.0	3.0
튀링겐	53.0	1.6	5.6	60.2	4.6	17.4	2.1	2.0	11.2	2.4
작센	43.6	0.9	13.2	57.7	5.7	15.1	1.7	3.0	13.3	3.5
베를린	18.3	1.0	2.2	21.5	3.0	34.8	2.7	6.3	30.2	1.5
계	40.8	0.9	6.3	48.0	5.3	21.9	2.0	2.9	16.4	3.5

주: 자유민주주의연맹(Bund Freier Demokraten, BFD), 연대 90(Bündnis 90), 녹색당(Grüne+Frauen).

출처: Grosser, Dieter, *Das Wagnis d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Politische Zwänge im Konflikt mit ökonomischen Regeln*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1998), p. 266.

- 민주적 절차에 의한 개혁성향 정부의 성립
  - 인민의회 소집, 드레지어 총리 지명(4.5)
  - 드메지어 연립내각 발족(4.12)



- 연방편입 결정
  - 독일동맹 의장단, 기본법 23조에 의한 통일 결의(3.1)
  - 드메지어 총리, 기본법 23조에 의한 통일방침 발표(4.19)
  - 동독 의회, 동독 국가를 해체하고 통일한다는 안건 채택(6.17)
  - 인민의회, 10월 3일 서독으로의 통합 결정(8.22)

### 나. 국제환경: 통일승인 분위기 고조

- 전승 4국 독일통일에 대한 승인으로 방향을 정립
  - 모드로우, 고르바초프 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원칙적으로 독일통일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성명 발표(1.30)
  - 양독과 전승4국, 2+4 회담 개최원칙에 합의(2.13)
  - 콜, 부시 회담, 통일독일의 NATO 잔류 합의(2.24)
  - 부시, 고르바초프 전화통화에서 통일독일 NATO 잔류 요구에 대하여 고르바초프는 거부 표현을 하지 않음(2.28)
  - 바르샤바 조약기구 외무장관 회동, 독일통일 인정(3.18)
  - 부시, 미테랑 플로리다 회담에서 독일통일에 합의(4.20)
- 2+4 회담
  - 본에서 2+4 회담 실무회의 개최(3.14)
  - 제1차 2+4 회담 개최(본, 5.5)
  - 제2차 2+4 회담 개최(동백림, 6.22)
  - 제3차 2+4 회담 개최(파리, 7.17), 오더-나이세 국경선 확정
  - 제4차 2+4 회담 개최(모스크바, 9.12), 독일문제의 최종해결 조약 조인

- 소련의 동의
  - 콜, 소련 방문, NATO 잔류 등 문제에 합의(7.15)
  - 동독, 바르샤바 조약기국에서 공식 탈퇴(9.24)

### 다. 경제: 동독경제의 부실 현실화와 사회적 시장경제 수용

- 동독경제는 사회주의 경제 중에서 양호한 편에 속했으나 사회주의 경제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이 드러났음.
  - 외연적 성장전략의 한계
  - 만성적 물자부족
  - 위장실업
- 동독의 정치엘리트들은 피폐해진 경제상황에 대한 처방으로 서독제도 도입을 결정.

### 라. 사회: 시민사회, 통일을 요구

- 동독 주민, 정치개혁을 넘어 통일 요구
  - 월요시위 참가자들, 통일 구호를 외침(1.8)
  - 서독 마르크화의 구매력 요구: “서독 마르크가 공급되면 우리는 (동독에) 남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르크에 다가갈 것이다”

### 마. 동서독 정부의 협상: 점진통일에서 조기통일로 선회

- 서독정부의 입장은 동독사태에도 불구하고 점진적 통일 입장 유지
  - 콜, 기자회견에서 동독과 공동체 조약을 위해 협상할 용의 있다고 언급(1.10)
  
- 서독정부, 조기통일로 방향 선회
  - 콜, 화폐통합 주장(2.6)
  - 총리가 주재하는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구성(2.7)
  - 1990년 여름까지 통화, 경제, 사회통합을 완료하겠다고 발표(3.20)
  
- 양독 간 경제통합 합의
  - 양독 총리, 7월 1일 통화, 경제, 사회통합에 합의(4.25)
  - 동서독 정부, 통화통합에 합의(5.2)
  
- 통일조약의 협상과 발효
  - 쇼이블레와 크라우제, 본(Bonn) 내무부에서 통일조약 가서명, 양독 국무회의 인준(8.31)
  - 양독 의회, 통일조약 비준안 가결(9.20)
  - 통일조약 발효(10.3)

### 3. 통일 합의

#### 가. 통일 합의 개념

- 통일 합의는 통일 당시 동서독 주요 당사자들이 통일독일의 체제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으로서 “서독제도의 총체적 이식” 즉, 제도이식(Institutionen transfer)을 지칭함.
  - 정치적으로는 기본법 23조 즉, 동독 지역의 서독 연방 편입에 의한 통일
  - 사회경제적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서독 제도를 동독 지역에 도입

#### 나. 통일 합의 도출의 요인들

- 통일독일의 체제에 대하여 서독제도의 이식으로 합의를 모을 수 있었던 요인도 동독요인, 국제환경요인, 서독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음.
- 동독요인: 위기의 인정과 개혁방향의 수용
  - 개혁성향의 정권이 등장한 이후 동독체제의 위기를 인정한 것이 통일 합의 도출에 기반으로 작용했음.
  - 개혁성향의 정권은 위기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독 제도의 수용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아갔음.

- 국제환경요인: 체감 안보위협요인으로서 통일독일의 의미 상쇄
  - 동구권의 연쇄적인 붕괴와 냉전 해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역사적 계기가 동독에게 다른 대안을 채택할 가능성을 차단시켰음.
  - 냉전해체 분위기의 조성은 전승4국이 초기에 독일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승인 또는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으며 이는 통일독일이 전승4국의 안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동의한 결과임.
  
- 서독요인: 확보한 주도권을 효과적으로 행사
  - 서독은 우수한 사회경제적 성과, 국제정치적 위상, 동독의 위기 상황을 바탕으로 거머쥔 주도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분단해소 단계 전 과정을 이끌었음.
  - 화폐통합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콜이 모드로우 정부가 경제개혁을 단행할 능력과 준비 상태를 의심했기 때문에 동독에 마르크를 공급해 동독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게 하고자 했음.
  - 화폐통합은 이후 통일과정을 결정한 사건으로서 동독에서 전개되었던 상황(동독 주민의 서독 마르크화 요구)을 포착하고 동독 정권에 노골적이지 않고 은근하게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가졌음.
  - 서독은 온건책뿐만 아니라 강경책도 구사했는데 2월 13일 콜과 모드로우 회담에서 모드로우가 조약공동체 통일방안을 다시 언급하면서 재정지원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화폐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상개시에 합의했음.
  -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적극적 외교도 국제합의를 끌어내는 데 기여했음.

## IV. 체제통합단계(1990.10.3~1995)

### 1. 특징

- 체제통합단계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통일 당시 합의된 내용이 실현되는 시기로서, 40년간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단계임.
- 정치통합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 동독 지역에서 사회주의 통일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을 제외하고는 주요 정당이 전국정당으로 기능함.
- 경제통합은 이 시기 체제통합의 핵심사안으로서 동독 지역에서 국유재산의 사유화 등 시장경제가 정착되는 단계임.
- 사회통합은 노동과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제도의 통합은 이루어져 가고 있으나 심리적 통합은 지체된 시기임.
-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가운데 경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국면으로서 동독 지역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임.

## 2. 분야별 상황전개

### 가. 정치: 신속한 통합에 성공하고 국제적 위상 제고

- 연방이 16개 주로 확대 구성
  - 1990년 10월 3일, 독일(서독)이 기존 11개 주에선 5개 주가 편입됨으로써 16개 주로 구성됨.
  
- 서독의 주요 정당이 동독에 세력을 확대하고 두 번의 선거에서 서독 지역과 큰 차이 없는 득표를 기록함.
  - 1990년과 1994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집권 기민당의 동독 지역 득표율이 서독 지역 득표율보다 높게 나타남.
  - 시민당은 1990년 선거에서 동독 지역에서 24.3% 득표로 참패한 후 1994년에는 31.5%로 선전했으나 서독 지역 득표율에 미치지 못함.
  -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인 민사당은 동독 지역에서 1990년에 11.1%, 1994년에 19.8로 약진했으나 독일 전체 득표율로 보면 소수정당으로 남았음.



〈표〉 독일 통일 이후 선거결과

(단위: %)

시기	구분	집권당			사민당	자민당	민사당	녹색당
		기민당	기사당	기사련				
1990.12	독일전체	36.7	7.1	43.8	33.5	11.0	2.4	5.1
	서독지역	35.5	8.8	44.3	35.7	10.6	0.3	4.8
	동독지역	41.8	-	41.8	24.3	12.9	11.1	6.2
1994.10	독일전체	34.2	7.3	41.5	36.4	6.9	4.4	7.3
	서독지역	33.2	8.9	42.1	37.5	7.7	1.0	7.9
	동독지역	38.5	-	38.5	31.5	12.9	19.8	4.3

주: 정당투표 득표율 기준, 서독지역에는 서베를린이, 동독지역에는 동베를린이 포함됨.  
출처: Bundeswahlleiter, <www.bundeswahlleiter.de/de> (검색일: 2012.9.20).

- 군사통합이 순조롭게 마무리됨.
  - 1990년 10월 3일 통일과 동시에 서독 간부를 동독 지역 부대의 지휘관과 참모로 배치됨.
  - 콜-엘친 공동성명(1992.12.16)에 따라 소련군은 1994년 8월 31일까지 철군을 완료함.
- 유럽통합
  - 통일 이전부터 추진했던 유럽통합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되면서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독일의 위상이 제고됨.

### 나. 경제: 계획경제의 해체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가동

- 신탁청의 활동으로 국유재산을 신속하게 사유화



〈표〉 국유재산 사유화 현황

총 사유화 수 (9만 1,042건)	기업체 사유화	기업 전체 매각	6,321건
		기업 지분의 다수 매각	225건
		영업소 매각	8,054건
		광산 소유권	502건
		계	1만 5,102건
	기업 재사유화	기업 전체 반환	1,588건
		영업소 반환	2,770건
		계	4,358건
	소규모 영업장 매각	식당·호텔·상점 등	2만 2,340건
		약국	1,734건
		서점	475건
		극장·영화관	481건
		계	2만 5,030건
	부동산 매각	신탁부동산회사	3만 6,845건
		신탁청	9,707건
계		4만 6,552건	
농림지 사유화	임대	121만 1,373ha	
	농경지 재사유화	32만 4,225ha	
	임야 재사유화	24만 8,189ha	
	농경지 매각	5만 6,670ha	
	임야 매각	1만 1,040ha	
사유화 이익	매각 수익	666억 마르크	
	투자 보장	2,111억 마르크	
	일자리 확보	150만 8천 명	

출처: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서울: 한울, 1997), p. 298.

- 동독 지역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음.
  - 연방정부, “동독부흥 공동대책” 발표(1991.3.8)

- 세금인상(1991.7.1)
- 제1차 연대협약(Soliarpakt I) 체결(1993.3.13)
  - 1995년부터 신연방주가 재정균형제도의 적용을 받음
  - 1995년부터 2004년까지 5개 신연방주와 베를린은 연간 206억 마르크의 재정지원을 받음
- 경제재건에 힘입어 동독 지역 자체에서 형성되는 재정도 상당부분을 차지

〈표〉 동독 지역에 대한 공공 재정 이전

(단위: 10억 마르크)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총이전	연방예산	75	88	114	114
	독일통일 기금	31	24	15	5
	유럽공동체	4	5	5	6
	연금보험	-	5	9	12
	연방고용청	24	25	15	17
	서독 주/지자체	5	5	10	14
	계	139	152	168	168
신연방주 자체 재정	신연방주 재정수입	31	35	37	41
	신연방주 행정수입	2	2	2	2
	계	33	37	39	43
순이전		106	115	129	126

출처: Deutscher Bundestag,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rucksache 13/2280, 1995), p. 114.

- 동독 지역의 산업은 급격한 구조조정에 힘입어 생산업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서비스업이 급팽창 함.

〈표〉 동독 지역 산업구조 변화

(단위: 천 명, %)

산업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	975.6	780.6	454.0	282.0	231.0	224.0
	전년 대비 변동		-20.0	-41.3	-37.9	-18.1	-3.0
	1989년 대비			-53.5	-71.1	-76.3	-77.0
생산업	취업자 수	4,385.4	3,944.1	2,987.0	2,281.0	2,157.0	2,164.0
	전년 대비 변동		-10.1	-24.3	-23.6	-5.4	0.3
	1989년 대비			-31.9	-48.0	-50.8	-50.7
도소매업	취업자 수	1,515.2	1,404.5	1,241.0	1,146.0	1,220.0	1,107.0
	전년 대비 변동		-7.1	-11.6	-7.7	-2.3	-1.2
	1989년 대비			-18.0	-24.2	-26.0	-26.8
서비스업	취업자 수	618.8	683.9	932.0	1,011.0	1,092.0	1,178.0
	전년 대비 변동		10.5	36.3	8.5	8.0	7.9
	1989년 대비			50.6	63.4	76.5	90.4

출처: Deutscher Bundestag,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rucksache 13/2280, 1995), pp. 398~399.

- 동독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통일 초기 두 자릿수에서 점차 하락  
- 서독 지역은 통일로 잠깐 동안의 특수를 누림.

### 다. 사회: 신속한 물리적 통합, 더딘 화학적 통합

-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의 결성, 산업별 단체협약, 사업장 공동결정 제도 등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제도는 서독의 제도가 급속하게 이식되었음.  
- 노동조합은 잠깐 동안의 통일 특수에 힘입어 조직률이 높았으나 곧 하향추세에 접어들었음.



〈표〉 노동조합 조직 변동 현황

(단위: 천 명, %)

	서독 지역			동독 지역		
	조합원 수	변화율	조직률	조합원 수	변화율	조직률
1991년	7,643		29.5	4,158		57.6
1992년	7,624	-0.2	29.2	3,392	-18.4	53.2
1993년	7,384	-3.2	28.8	2,907	-14.2	47.3
1994년	7,179	-2.7	28.5	2,589	-10.9	42.1
1995년	6,994	-2.5	28.0	2,360	-8.8	37.9

주: 변화율은 조합원 수가 전년에 대비해 변화된 비율을 의미함.  
출처: Sebaldt, Martin, et al. (eds.), "Verbände im Transformationsprozess Ostdeutschlands," *Interessenverbände in Deutschland*, Wiesbaden: VS Verlag (Winter 2007), p. 504.

- 복지제도는 신속하게 통합되어 갔으며 사회보험 제도가 신속하게 이전되어 가동되었음.
- 사회심리적 통합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통일 직후부터 서독 주민은 1등 국민, 동독 주민은 2등 국민이라는 "Ossi-Wessi"의 문제가 나타났음.
- 결국, 사회분야에서의 하드웨어는 신속하게 통합되었지만 소프트웨어의 통합은 지체되어 가고 있었음.

### 3. 제도의 이식과 가동

#### 가. 제도이식과 가동의 영역별 편차

- 정치, 군사적 통합은 이미 완료되었고 국제정치적으로 독일은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행위하기 시작함.

- 이 시기 핵심 쟁점은 경제통합으로 동독 지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가동을 시작하는 시기임.
  - 시장경제의 작동을 위한 준비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나 아직 동독 지역이 자생력을 갖춘 경제단위로 기능하지는 못함.
  
- 사회통합은 가장 더디게 진행됨.
  - 사회제도가 이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독과 같이 작동되지는 않았음.
  - 가치지향의 차이에 기인한 동서독 주민 간의 심리적 이질감은 이시기 초기부터 문제가 되었음.

### 나. 제도이식 부문별 편차의 요인들

- 체제통합의 속도는 정치부문이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이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음.
  
- 체제통합의 속도와 완성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배경은 부문별 속성에 있음.
  - 정치통합은 성격상 제도의 통합으로 실질적인 통합이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임. 여기에는 서독의 주요정당이 동독 지역에 세력을 확산시킨 것이 크게 작용했음. 그럼에도 동독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이 일정하게 구동독 지향성을 가진 주민의 정치적 대변을 맡았음.

- 경제통합은 외형상 신속하게 이루어져 갔음. 그러나 체제전환은 제도의 이식으로 완결될 수 없는 속성이 있어 지역간의 격차가 극복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함(예: 실업률).
- 사회통합은 가장 더디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영역임. 이는 제도의 이식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가치지향의 차이 등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함.

## V. 국가완성단계(1996~2005)

### 1. 특징

- 국가완성단계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통합의 속도와 정도의 차이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하나의 국가로 운영되는 단계로서 통일이 내재하는 잠재적 위기를 무난히 관리하는 단계임.
- 정치통합에서 서독정당의 동독 지역으로의 확장에 힘입어 공산주의 계승정당인 민주사회당(PDS)이 군소정당으로 전락함.
- 경제통합은 주요 경제정책이 통일 특수성이 약화되고 독일경제 전반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는 시기임.
- 사회통합은 체제통합 단계에서 나타난 이질성을 안고 있으나 적절히 관리되는 단계임.

- 국가완성단계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가운데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로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분열로 치닫지 않을 정도로 사회통합이 무난하게 진행되는 단계임.

## 2. 분야별 상황전개

### 가. 정치: 하나의 국가로 작동

- 군사 및 대외관계는 이미 통일독일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위상을 공고화 함.
- 국내정치적으로 선거에 의한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1998년 선거에서는 기민당에서 사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됨.
  - 2005년 선거에서는 사민당에서 기민당으로 원내 제1정당이 바뀌어 대연정이 성립되고 동독출신 수상이 나타남.

### 나. 경제: 동독 지역 경제의 자생력 구축 및 경제적 이질성의 극복 노력

- 국가완성단계는 체제통합 단계를 벗어나면서 동독 지역의 경제가 자생력을 갖추고 경제적 이질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단계임.
  - 동독 지역 경제는 GDP 성장, 생산성 등에서 서독 지역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음.
  - 경제적 이질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이것이 독일 경제 전반을 흔들 정도는 아님.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연대협정 II”(Solarpakt II)에 합의함(2001).
  -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
-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적 통합에 비중을 두었던 체제통합 단계와는 달리 독일경제 전반을 두고 이루어짐.
  - 슈뢰더의 신중도 노선과 의제 2010 개혁은 통일경제가 아니라 독일 경제 전반의 회생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다. 사회: 수용가능한 이질성의 안착**

- 노동 및 복지제도 자체는 완전히 통합되어 서로 다른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제도로 작동하기 시작함.
- 제도의 이식으로 완결되지 않고 행위에 의해 작동되는 분야는 여전히 동서독 지역 간 차이가 있으나 이질성의 정도가 약화되어 수용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됨.
- 사회심리적 통합은 체제통합 단계에서 나타난 심리적 거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약해짐.



### 3. 통일위기의 관리와 극복

#### 가. 통일위기 개념

- 서로 다른 두 체제가 합쳐져 하나로 움직이게 되는 데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위기의 모멘텀을 잠재하고 있음.
- 체제통합 단계가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를 하나로 합치는 단계라면 국가완성 단계는 물리적으로 합쳐진 체제가 화학적으로 순조롭게 작동하는 것이 핵심사안임.
- 화학적 통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적응과 이상징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함.
- 통일 독일은 화학적 통합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이 나타날 수 있었음.
  - 정치통합: 동서독 지역 간에 정당의 지지가 분리되어 전국정당이 아니라 지역정당이 할거하게 되는 상황
  - 경제통합: 동서독 지역 경제의 이질성이 관리불가능할 정도로 커져 동독 지역의 경제가 서독 지역으로부터의 수혈 없이는 작동되지 않는 상황
  - 사회통합: 정치, 경제통합의 위기와 연관되어 갈등요인이 잠재력으로 그치지 않고 봉기 등의 형태로 표출되는 상황

- 통일 독일은 이상과 같이 잠재적인 위기상황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고 효과적으로 관리된 사례로 해석할 수 있음.

## 나. 통일위기 발생 억제 요인

-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었던 통일위기가 현실화되지 않고 제한적이거나 비교적 성공적으로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정치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동서독 지역 간에 비교적 동질적인 정치세력화에 성공했다는 점임.
  - 기민당, 사민당 등 주요 정당이 신속하게 동독 지역에 뿌리를 내렸음.
  - 동독출신인 메르켈(Merkel)은 사민당 집권기에 기민당 당수로 선출되었고 정권이 교체된 2005년에 수상으로 취임했음.
  - 다만 2005년 선거에서 좌파당이 결성되어 동독 지역에 일정한 영향력을 지니는 정당으로 성장하였으나 이는 독일정치에서 분열의 요인이 아니었음.
-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을 제한하는 “조정된 시장경제”라는 점에서 경제통합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장경제를 ‘사회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제를 가진 경제체제이기에 동독경제가 적응하기에 용이한 체제였다는 점임.
  - 사회적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평등지향성과 같은 경제윤리가 동서독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이었다는 점도 작용함.

- 경제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활수준의 균등화”라는 통일합의가 비록 더디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음.
  - 노동과 복지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동서독 주민의 생활수준이 서서히 근접해 가고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통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체제통합 단계에서 나타났던 간극은 좁아지고 있었음.
  
- 결국, 독일에서 통일위기가 현실화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던 요인은 두 가지로 요약됨.
  - 첫째, 제도이식이라는 방식 자체가 이질성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함으로써 통일과정을 위협할 잠재요소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접종을 거쳤음.
  - 둘째, 제도이식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주요 당사자들의 노력이 주효했음(예: 연대협약 체결의 사례).

## VI. 정상국가 운영시기(2005~)

### 1. 특징

- 동서독 지역 간의 이질성은 남아 있지만 통일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드는 단계임.

- 정치통합은 동독출신 수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함.
- 경제통합은 독일경제가 본격적으로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단계임.
- 사회통합은 사회심리적 이질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통합을 달성하는 단계임.
-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서독 지역 간의 이질성은 존재하고 있고, 이질성의 정도 역시 분야별로 편차가 있으나 독일의 통일은 거스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단계임.

## 2. 분야별 상황전개

### 가. 정치: 동독 출신 수상의 안정적 국정운영

- 2005년 선거로 집권한 메르켈 정부가 사민당과의 대연정(2005~2009), 자민당과의 연정(2009~)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함.
- 동독 지역에서 거대 양당 이외에 좌파당이 일정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함.
  - 이는 동독 지역에서 동독향수에 젖어 있는 유권자를 포섭함으로써 정치세력화하여 정치적 이탈로부터 안식처를 제공함과 아울러 거대 양당에게는 좌파 세력의 존재를 일깨워 줌으로써 독일 정치지형 전체로 볼 때 건강한 주변 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나. 경제: 동독 지역 경제의 자생력 구축 및 경제적 이질성의 극복 노력 가속화

- 체제통합 단계를 벗어나면서 동독 지역의 경제가 자생력을 갖추고 경제적 이질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둠.
  - 동서독 지역 간 격차는 서서히 좁혀져 가고 있음.
  - “동독부흥은 본질적으로 동서독 지역의 공동성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동독 지역의 GDP가 계속 성장하여 서독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연방주는 안정적이고 견고한 산업구조 덕분에 경제위기 속에서도 전진했습니다”라고 고양된 분위기였음 (2011년판 독일통일현황 보고서를 내는 자리에서 내무장관 Hans-Peter Friedrich의 발언, 내무부 언론보도자료).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연대협정 II”(Soliarpakt II) 발효
  -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되는 연대협정은 동독 지역에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동독 지역 경제가 여전히 서독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이미 독일경제가 작동하는 방식 중의 하나에 동독 지역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함.

## 다. 사회: 수용가능한 이질성의 안착 지속

- 사회심리적 간극은 여전하나 거리가 서서히 좁혀져 일정하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착되는 상황이 지속됨.

### 3. 통일 불가역성의 성취

#### 가. 통일 불가역성 개념

- 정상국가 단계의 특징은 통일이 객관적, 주관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사실로 고착되는 상황임.
- 그러나 정상국가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모든 측면에서 독일의 통합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통합은 종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이해할 때 통일 불가역성은 통합의 과정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안착되는 상황을 말함.

#### 나. 통일 불가역성의 지표

- 정치: 정당정치의 성공적 통합
  - 동독 지역에 민사당(PDS), 그 후신인 좌파당(라퐁텐 중심의 사민당 좌파 일부와 기지의 민사당이 2005년에 통합)이 동독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지는 못하고 형식적 다당제, 실질적 양당제라는 정당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음.
- 경제: 동독경제의 자생력 확보
  - 동독 지역 경제의 자생력 확보 상태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음.
  -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여전히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밑빠진 독”이라고 주장

-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일정한 자생력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봄.
- 결론적으로 경제구조상의 이질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간격은 서서히 좁혀져 가고 있으며 자기완결적 구조의 정착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독이 서독경제에 기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사회: 이질성의 관리가능성 안착

- 사회통합은 가장 어렵고 오래 걸리는 과제로서 사회통합 상태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음.
-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병존하고 있으나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판단됨.
- 다만, 문화적, 심리적 이질성은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체제통합에 따르는 예상되는 충격에 비해서는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총론: 통일의 정당성을 견고하게 확보

-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전상태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존재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음.

## VII. 독일통일 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함의

○ 통일준비시기: 남한의 선도권 확보를 위한 조건의 내실화

- 독일통일 과정에서 일관되게 관철되었던 작동논리는 ‘서독의 우위’였

으며 서독이 동독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통일 전 과정을 주도하게 된 배경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내적 요인으로는 서독의 탁월한 사회경제적 기초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으며 이런 기초에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했던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사회경제체제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교류협력을 통해 서독의 생활수준에 대한 정보가 동독에 흘러들어가 동독 주민이 통일을 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 외적 요인으로는 서독의 견고한 국제적 위상이 확립되고 구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의 연쇄적인 붕괴 움직임이 큰 몫을 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양독의 활발한 교류도 중요한 요인이었음.

- 독일통일 사례를 참고하여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남한의 사회경제 체제가 한 단계 성숙해야 하며 개발독재를 거치면서 형성된 성장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함.
-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것이 결국 북한 주민에게는 남한의 삶을 동경하게 되고 통일을 원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 외적 요인으로는 우리의 통제범위에서 벗어나는 사안이 많으나 적어도 남북교류의 활성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교류의 활성화는 단기적 이득도 중요하겠지만 북한 주민의 생활향상, 남북 간의 이질성 축소, 남북한 주민 간의 적대감 완화 등과 같은 장기적인 통일 인프라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분단해소기: 북한을 돌이킬 수 없는 개혁과 통일과정으로 견인
  - 독일 사례에서 분단해소단계의 특징은 서독이 동독으로 하여금 경제 개혁과 통일 이외의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을 줄였던 것이며 이를 위해 서독정부가 취했던 주요한 조치는 선개혁 후지원 노선, 화폐통합 결정, 외교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위기에 처한 동독정부는 서독정부에게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했으나 서독정부는 먼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경제개혁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도록 압박했음.
    - 동독 지역에 마르크화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조치(1990.2)는 동독의 개혁과 통일의 결정적인 방향설정이었음.
    - 2차대전 이후 산물로 분단되었던 양독이 통일로 가는 길은 국제정치적 맥락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서독정부의 외교라인이 보여 주었던 신중하면서 능수능란한 외교는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냈음.
  - 우리의 입장에서 이 시기를 해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돌이키기 어려운 과정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개혁개방 노선의 정착은 이 시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입장에서는 통일 준비시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 판단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의 교류 확대, 대중국 외교를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을 추진해야 함.
    - 통일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적절한 시기 포착을 통해 기회를 놓치지

지 않아야 하며 서독의 경우 화폐통합 결정이 결정적 모멘텀이었으나 우리의 경우 화폐통합뿐만 아니라 통일무드가 형성되었을 때 실기하지 않는 조치들을 다각도로 강구해 두어야 함.

- 전승4국의 동의가 없으면 통일할 수 없었던 독일의 사례와는 다르지만 우리도 국제정치적 맥락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통일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주변국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할 것임.

#### ○ 세부 시나리오 준비

- 독일 통일은 단기간에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업적으로 인정되지만 “즉흥성”, 과도한 통일비용, 지역적 이질성의 잔존 등이 비판받기도 함.
- 통일 사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는 것이 긴요할 것임.

## VIII. 부표: 통일 이후 주요 지표

### 1. 연방하원(Bundestag) 선거 정당 득표율

- 독일의 정당제도는 형식적으로 다당제이나 기민당과 사민당 양대정당이 독일정치를 주도하는 두 개의 거대정당 존재

- 통일 이후 6번에 걸친 역대 연방하원 선거에서 기민당과 사민당이 올린 득표율은 독일전체, 서독 지역, 동독 지역에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으며 이는 대체로 거대양당이 통일 이후 전국 정당화하는데 성공했음을 의미
- 좌파당(사민당 좌파인 라퐁텐과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인 민주사회주의당이 통합하여 만든 정당)의 동서독 지역 간 득표율에 차이가 있음.
  - 2009년 9월 선거에서 좌파당은 동독 지역에서 1/4 이상을 득표

〈표〉 통일 이후 선거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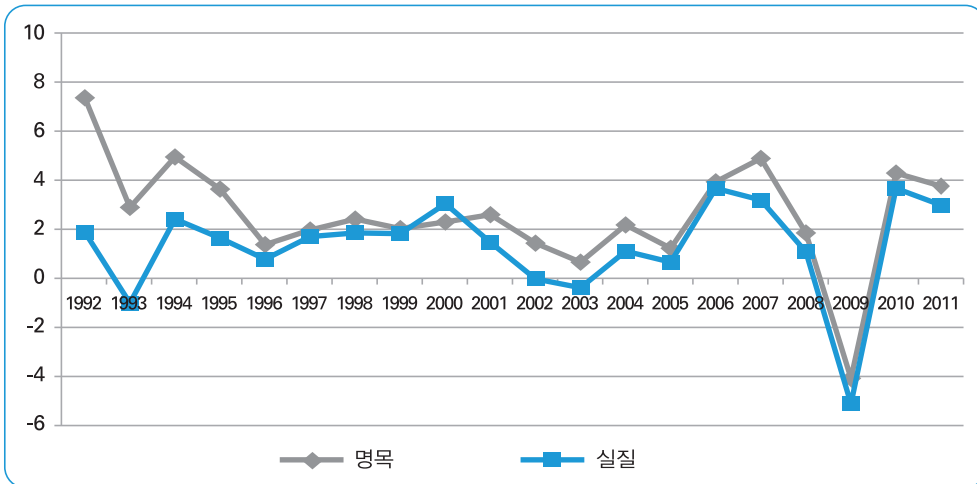
시기	구분	기민당	기사당	기사련	사민당	자민당	좌파당	녹색당
1990.12	독일전체	36.7	7.1	43.8	33.5	11.0	2.4	5.1
	서독지역	35.5	8.8	44.3	35.7	10.6	0.3	4.8
	동독지역	41.8	-	41.8	24.3	12.9	11.1	6.2
1994.10	독일전체	34.2	7.3	41.5	36.4	6.9	4.4	7.3
	서독지역	33.2	8.9	42.1	37.5	7.7	1.0	7.9
	동독지역	38.5	-	38.5	31.5	3.5	19.8	4.3
1998.9	독일전체	28.4	6.7	35.1	40.9	6.2	5.1	6.7
	서독지역	28.7	8.4	37.1	42.3	7.0	1.2	7.3
	동독지역	27.3	-	27.3	35.1	3.3	21.6	4.1
2002.9	독일전체	29.5	9.0	38.5	38.5	7.4	4.0	8.6
	서독지역	29.8	11.0	40.8	38.3	7.6	1.1	9.4
	동독지역	28.3	-	28.3	39.7	6.4	16.9	4.7
2005.9	독일전체	27.8	7.4	35.2	34.2	9.8	8.7	8.1
	서독지역	28.4	9.1	37.5	35.1	10.2	4.9	8.8
	동독지역	25.3	-	25.3	30.4	8.0	25.3	5.2
2009.9	독일전체	27.3	6.5	33.8	23.0	14.6	11.9	10.7
	서독지역	26.7	7.9	34.6	24.1	15.4	8.3	11.5
	동독지역	29.8	-	29.8	17.9	10.6	28.5	6.8

출처: Bundeswahlleiter, <[www.bundeswahlleiter.de/de](http://www.bundeswahlleiter.de/de)> (검색일: 2012.9.20).

## 2.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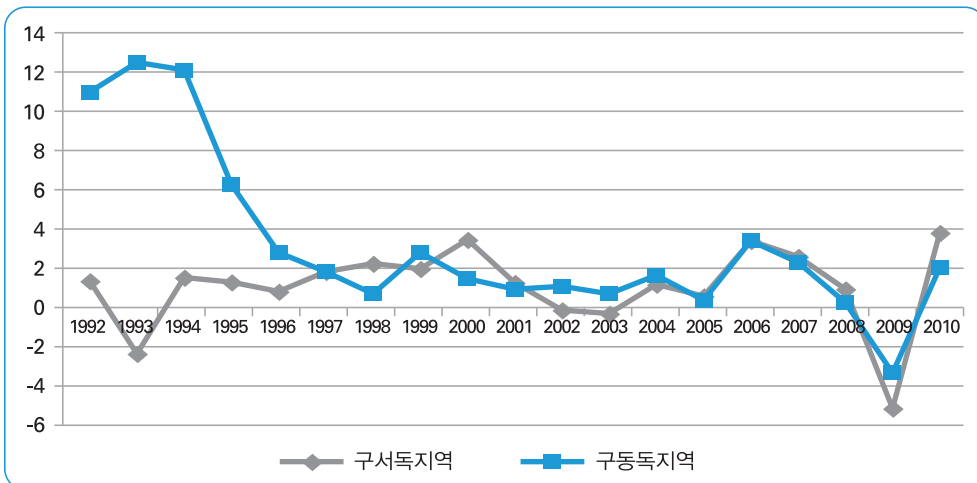
- 통일 직후 4-5년간 통일 특수 및 특수 소멸로 GDP 성장률이 급변, 이후 독일 전체 경제 동향에 따라 영향

〈그림〉 경제성장률 추이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www.destatis.de/DE/Startseite.html](http://www.destatis.de/DE/Startseite.html)> (검색일: 2012.9.25).

〈그림〉 동·서독 지역의 경제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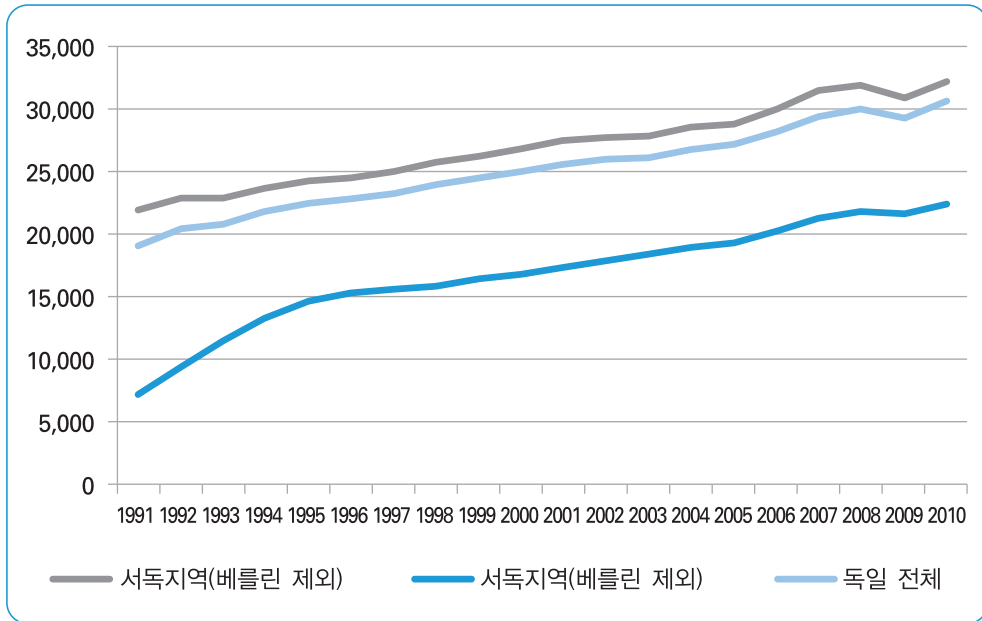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www.destatis.de/DE/Startseite.html](http://www.destatis.de/DE/Startseite.html)> (검색일: 2012.9.25).

### 3. 1인당 GDP

- 격차가 유지되고 있으나 간격은 축소되어 가는 경향

〈그림〉 1인당 GDP 동·서독 지역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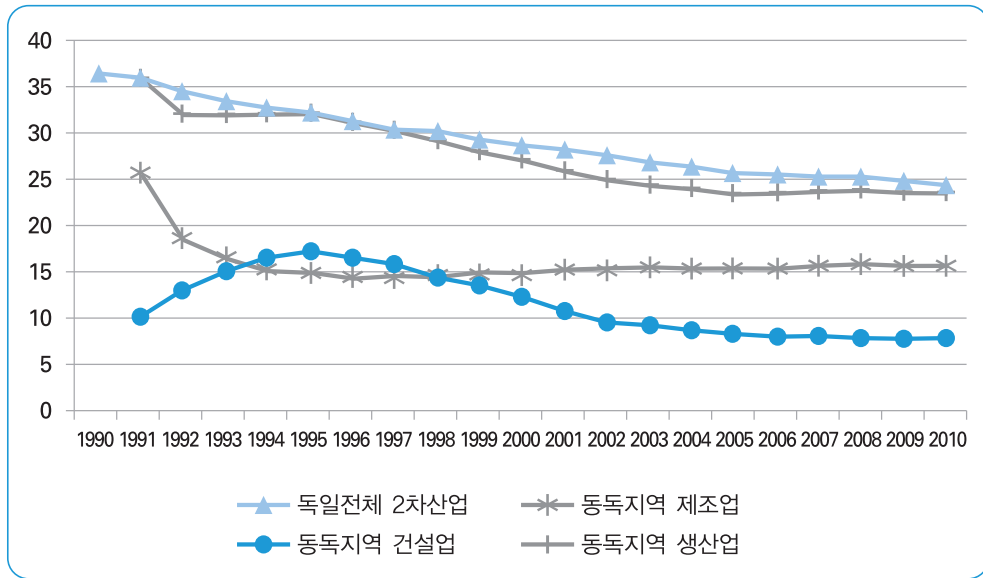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www.destatis.de/DE/Startseite.html](http://www.destatis.de/DE/Startseite.html)> (검색일: 2012.9.25).

## 4. 산업구조

- 통일 초기 동독 지역은 급속한 탈산업화 과정을 거쳤으나 빠르게 전체 독일의 산업구조에 수렴하고 있음.

〈그림〉 산업구조의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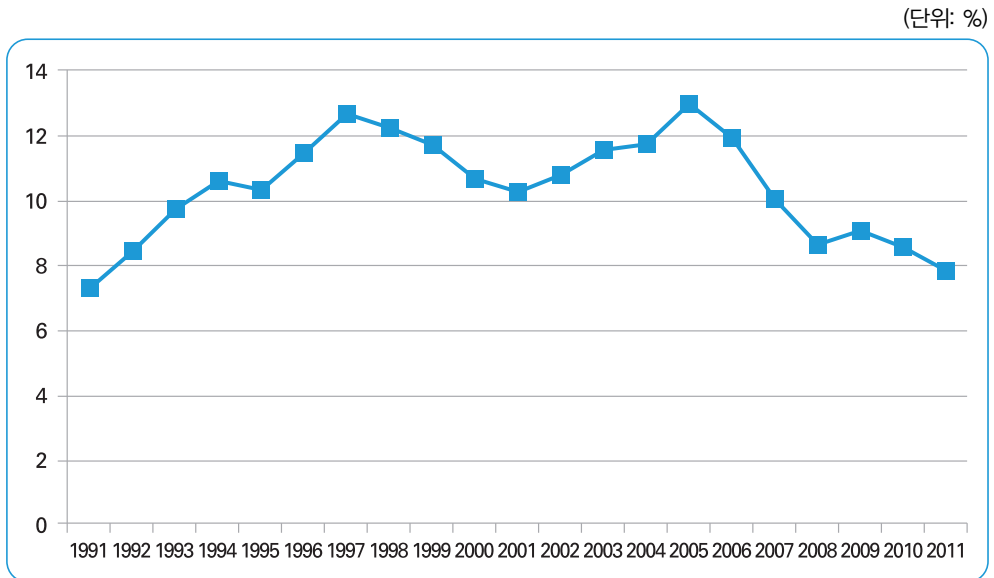


출처: <[www.destatis.de/DE/ZahlenFakten/Indikatoren/LangeReihen/Arbeitsmarkt/lrerw013.html](http://www.destatis.de/DE/ZahlenFakten/Indikatoren/LangeReihen/Arbeitsmarkt/lrerw013.html)>  
(검색일: 2012.9.25).

## 5. 실업률

- 통일 초기에 실업률이 상승하다 1997년, 2005년을 정점으로 낮아지는 추세임.

〈그림〉 실업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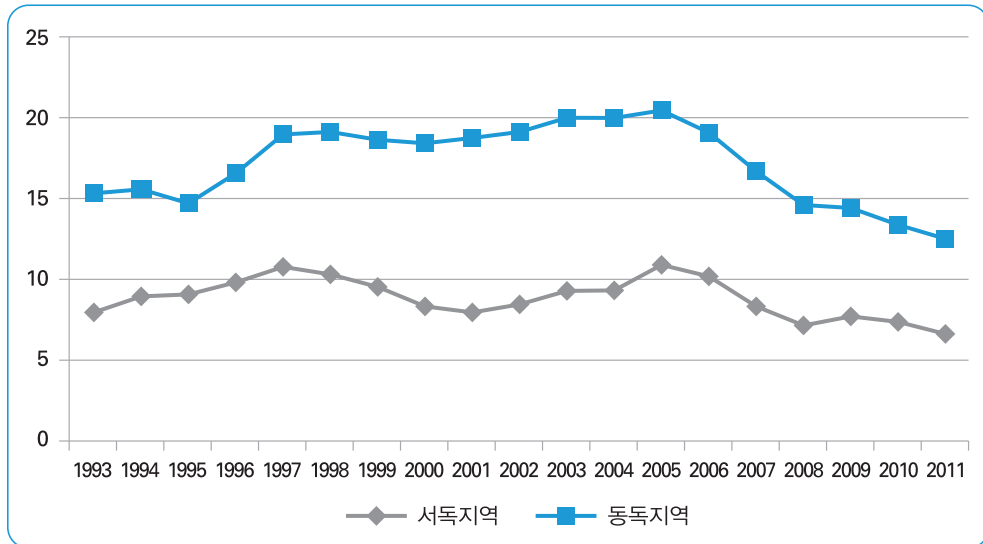


출처: BA(Bundesagentur für Arbeit), <[www.arbeitsagentur.de](http://www.arbeitsagentur.de)> (검색일: 2012.10.2).

- 지역 간 비교를 해보면 동독 지역의 실업률이 서독 지역의 실업률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그림〉 동·서독 지역 간 실업률 비교

(단위: %)



출처: BA(Bundesagentur für Arbeit), <www.arbeitsagentur.de> (검색일: 2012.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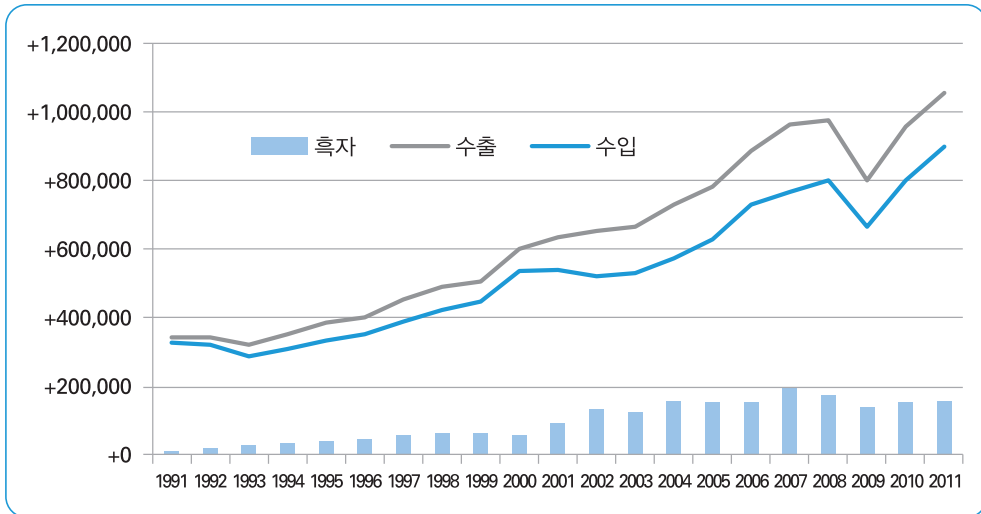


## 6. 국제수지

- 대외 무역 수지가 통일 이후 적자로 돌아선 적이 없고 흑자규모를 유지함.
  - 이는 통일 이후 독일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그림〉 통일 이후 독일의 국제수지

(단위: 백만 유로)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www.destatis.de/DE/Startseite.html](http://www.destatis.de/DE/Startseite.html)> (검색일: 2012.9.25).

- 동독 지역 기업은 서독 지역 기업에 비해 수출지향성이 낮음.
  - 2010년 현재 50인 이상 기업의 생산물이 수출되는 비중은 독일 전체적으로 46.1%임.
  - 서독 지역의 기업은 그 비중이 47.6%인데 반해 동독 지역의 기업은 34.1%임(독일통일현황보고서 2011, 부록 12쪽).



## 7. 인구이동

〈표〉 인구이동

(단위: 명)

연도	동독에서 서독으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순이동
1989	388,396	5,135	383,261
1990	395,343	36,217	359,126
1991	249,743	80,267	169,476
1992	199,170	111,345	87,825
1993	172,386	119,100	53,286
1994	163,034	135,774	27,260
1995	168,336	143,063	25,273
1996	166,007	151,973	14,034
1997	167,789	157,348	10,441
1998	182,478	151,750	30,728
1999	195,530	151,943	43,587
2000	204,283	135,517	68,766
2001	230,202	138,748	91,454
2002	216,168	139,412	76,756
2003	195,216	137,517	57,699
2004	185,878	133,349	52,529
2005	175,088	127,996	47,092
2006	173,602	122,918	50,684
2007	176,116	127,336	48,780
2008	173,998	132,577	41,421
2009	156,411	137,908	18,503

주: 동독지역은 동베를린 포함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Datenreport 1999* (Wiesbade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00), p. 51; Statistisches Bundesamt, *Datenreport 2011*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1), p. 17.

## 8. 노조 조직률

○ 노조 조직률은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표〉 노조 조직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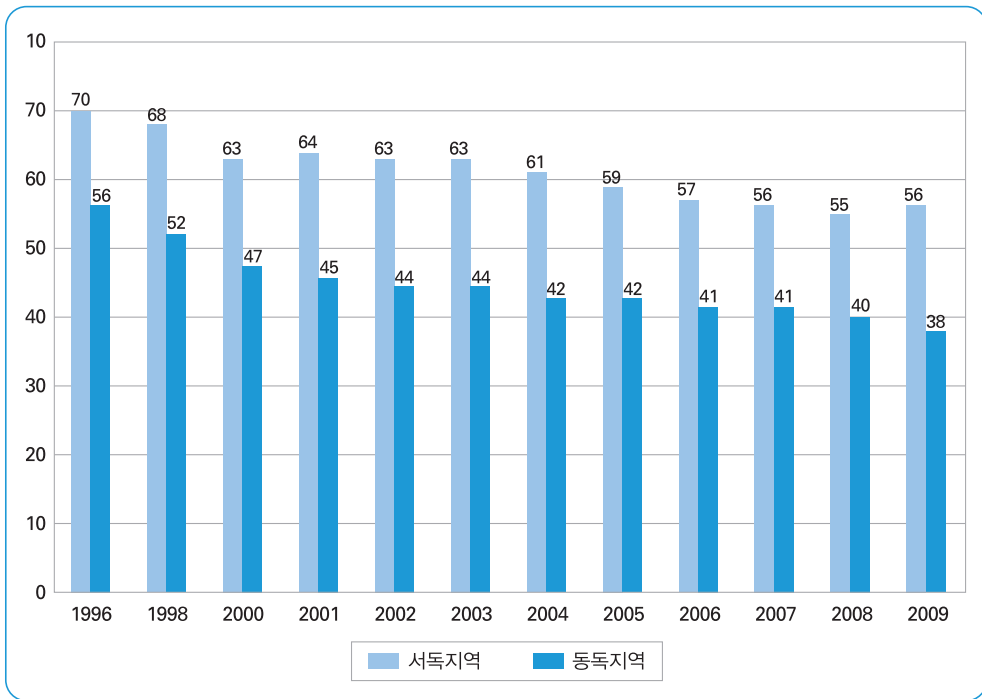
연도	조합원 수(명)	취업노동자 수(천 명)	조직률(%)
1991	11,800,412	35,101	33.6
1992	11,015,612	34,482	31.9
1993	10,290,152	33,930	30.3
1994	9,768,373	33,791	28.9
1995	9,354,670	33,852	27.6
1996	8,972,672	33,756	26.6
1997	8,623,471	33,647	25.6
1998	8,310,783	34,046	24.4
1999	8,036,687	34,567	23.2
2000	7,772,795	35,229	22.1
2001	7,899,009	35,333	22.4
2002	7,699,903	35,093	21.9
2003	7,363,147	34,653	21.2
2004	7,013,037	34,658	20.2
2005	6,778,429	34,480	19.7
2006	6,585,774	34,684	19.0
2007	6,441,045	35,288	18.3
2008	6,371,475	35,845	17.8
2009	6,264,923	35,853	17.5

출처: <www.dgb.de> (검색일: 2012.10.10); Statistisches Bundesamt, <www.destatis.de/DE/Startseite.html> (검색일: 2012.10.10).

○ 단체협약 적용률은 동서독 지역 간 일정한 편차가 유지되고 있음.

〈그림〉 단체협약 적용률의 동·서독 비교

(노동자 수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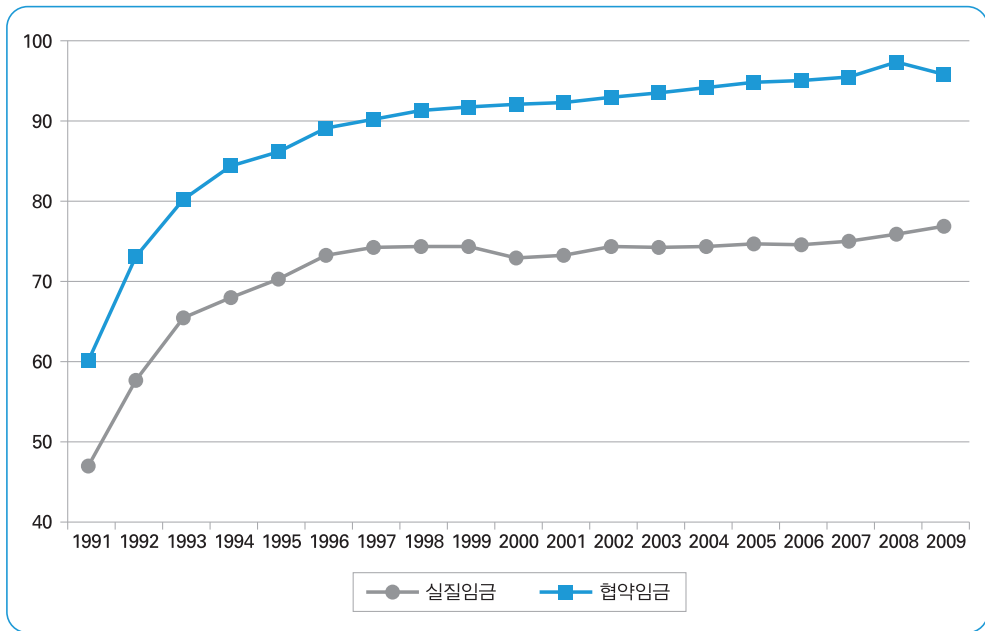
출처: <www.iab.de> (검색일: 2012.9.25).

## 9. 임금수준

- 임금수준은 서서히 서독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음.

〈그림〉 동·서독 임금수준 비교

(단위: %)



출처: <[www.destatis.de/DE/Startseite.html](http://www.destatis.de/DE/Startseite.html)> (검색일: 2012.9.20).

## 10. 고용의 질: 사회보험 가입자 수

- 취업자 중에서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의 비중은 통일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 비중은 오히려 동독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표〉 취업자 중 사회보험 가입자

(단위: 천 명, %)

연도	취업자 수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자 수			비율		
	독일전체	서독지역	동독지역	독일전체	서독지역	동독지역	독일전체	서독지역	동독지역
1992	38,059	30,468	7,591	29,325	23,530	5,795	77.1	77.2	76.3
1993	37,555	30,129	7,426	28,596	23,122	5,474	76.1	76.7	73.7
1994	37,516	29,953	7,563	28,238	22,755	5,483	75.3	76.0	72.5
1995	37,601	29,919	7,682	28,118	22,597	5,521	74.8	75.5	71.9
1996	37,498	29,893	7,605	27,739	21,536	6,203	74.0	72.0	81.6
1997	37,463	29,967	7,496	27,280	21,321	5,959	72.8	71.1	79.5
1998	37,911	30,412	7,499	27,208	21,330	5,878	71.8	70.1	78.4
1999	38,424	30,913	7,511	27,483	21,646	5,837	71.5	70.0	77.7
2000	39,144	31,661	7,483	27,826	22,098	5,727	71.1	69.8	76.5
2001	39,316	31,935	7,381	27,817	22,267	5,550	70.8	69.7	75.2
2002	39,096	31,832	7,264	27,571	22,183	5,389	70.5	69.7	74.2
2003	38,726	31,551	7,175	26,955	21,730	5,224	69.6	68.9	72.8
2004	38,880	31,684	7,196	26,524	21,412	5,112	68.2	67.6	71.0
2005	38,835	31,685	7,151	26,178	21,206	4,972	67.4	66.9	69.5
2006	39,075	31,866	7,209	26,354	21,340	5,014	67.4	67.0	69.6
2007	39,724	32,388	7,336	26,855	21,737	5,117	67.6	67.1	69.8
2008	40,279	32,863	7,416	27,458	22,239	5,219	68.2	67.7	70.4
2009	40,265	32,847	7,418	27,380	22,164	5,216	68.0	67.5	70.3

출처: BA(Bundesagentur für Arbeit), <www.arbeitsagentur.de> (검색일: 2012.10.2).

## 11. 연금수준

○ 연금 수준도 서독 지역에 근접해 들어가고 있음.

〈표〉 동·서독 지역의 연금수준 비교

(단위: 마르크, 유로, %)

연도	서독 지역		동독 지역		동·서독 비율
	40년 가입시	45년 가입시	40년 가입시	45년 가입시	
1991	165,750	186,470	84,426	94,979	50.9
1992	170,520	191,835	106,280	119,565	62.3
1993	177,960	200,205	128,680	144,765	72.3
1994	184,000	207,000	137,960	155,205	75.0
1995	184,920	208,035	145,320	163,485	78.6
1996	186,680	210,015	153,520	172,710	82.2
1997	189,760	213,480	162,040	182,295	85.4
1998	190,600	214,425	163,480	183,915	85.8
1999	193,160	217,305	168,040	189,045	87.0
2000	194,320	218,610	169,040	190,170	87.0
2001	198,040	222,795	172,573	194,145	87.1
2002	103,440	116,370	90,800	102,150	87.8
2003	104,520	117,585	91,880	103,365	87.9
2004	104,520	117,585	91,880	103,365	87.9
2005	104,520	117,585	91,880	103,365	87.9
2006	104,520	117,585	91,880	103,365	87.9
2007	105,080	118,215	92,413	103,965	87.9
2008	106,240	119,520	93,360	105,030	87.9
2009	108,800	122,400	96,520	108,585	88.7

주: \* 월 평균 연금 수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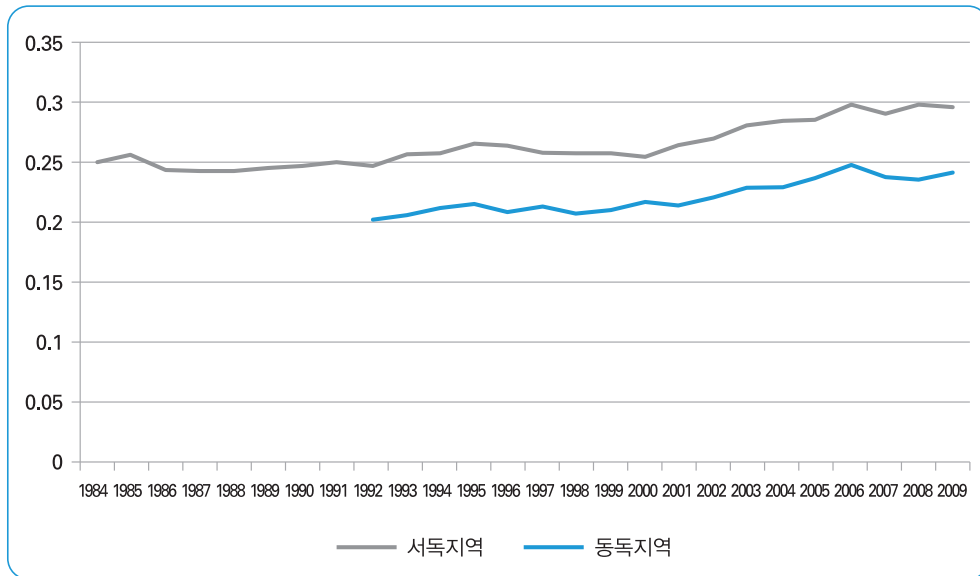
\* 2001년까지는 마르크, 2002년부터는 유로화 기준.

출처: BMAS, <[www.bmas.de/DE/Startseite/start.html](http://www.bmas.de/DE/Startseite/start.html)> (검색일: 2012.9.15).

## 12. 소득 불평등도

- GINI 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 정도는 동독 지역이 서독 지역보다 매우 근소한 차이로 양호하게 나타남.

〈그림〉 동·서독 지역 간 소득불평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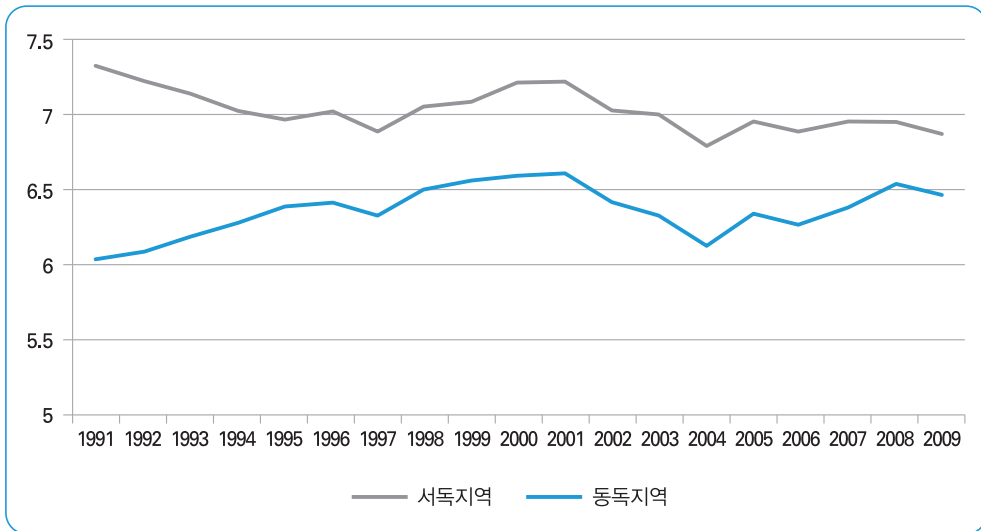
출처: <[www.diw.de/deutsch/soep/29004.html](http://www.diw.de/deutsch/soep/29004.html)> (검색일: 2012.9.21).



### 13. 생활만족도

-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통일 초기단계에 격차가 컸으나 이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됨.

〈그림〉 동·서독 지역 간 생활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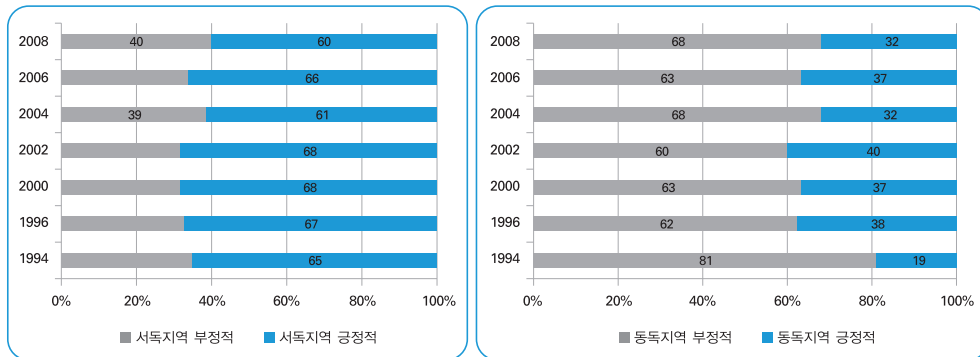


출처: <[www.diw.de/deutsch/soep/29004.html](http://www.diw.de/deutsch/soep/29004.html)> (검색일: 2012.9.21).

## 14. 사회정의감

- 사회정의가 얼마나 실현되었는가에 대한 지표는 여전히 동서독 지역 간에 격차가 있으나 간극은 좁혀지고 있음.

〈그림〉 동·서독 지역 간 사회정의감 비교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Datenreport 2011*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1), p. 389.

##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 참고문헌

### 1. 단행본

김규륜 외.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 모형 구축』. 서울: 통일연구원, 2012.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서울: 한울, 1997.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조성렬. 『뉴 한반도비전: 비핵 평화와 통일의 길』. 서울: 백산서당, 2012.

Satori, G.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1*. Berlin: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11.

Deutscher Bundestag.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rucksache 13/2280. Berlin: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1995.

Grosser, Dieter. *Das Wagnis d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Politische Zwänge im Konflikt mit ökonomischen Regeln*.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1998.

Statistisches Bundesamt. *Datenreport 1999*. Wiesbade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00.

\_\_\_\_\_. *Datenreport 2011*.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1.

## 2. 논문

김용욱. “예멘과 독일의 통일사례 비교와 시사점: 통합 합의과정 및 통일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1호(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이효원.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방안.”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Lijphart, A. “Typologies of Democratic System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1, No. 1, April 1968.

Sebaldt, Martin, et al. (eds.). “Verbände im Transformationsprozess Ostdeutschlands,” *Interessenverbände in Deutschland*. Wiesbaden: VS Verlag, Winter 2007.

## 3. 기타자료

송태수. “1989/90년 격변기 동독 내 서독 정당의 전략과 정책.” FES-Information-Series 2006-01, 2006.1.

<[www.arbeitsagentur.de](http://www.arbeitsagentur.de)>.

<[www.bmas.de/DE/Startseite/start.html](http://www.bmas.de/DE/Startseite/start.html)>.

<[www.bundeswahlleiter.de/de](http://www.bundeswahlleiter.de/de)>.

<[www.destatis.de/DE/Startseite.html](http://www.destatis.de/DE/Startseite.html)>.

<[www.destatis.de/DE/ZahlenFakten/Indikatoren/LangeReihen/Arbeitsmarkt/lrerw013.html](http://www.destatis.de/DE/ZahlenFakten/Indikatoren/LangeReihen/Arbeitsmarkt/lrerw013.html)>.

<[www.dgb.de](http://www.dgb.de)>.

<[www.diw.de/deutsch/soep/29004.html](http://www.diw.de/deutsch/soep/29004.html)>.

<[www.iab.de](http://www.iab.de)>.



##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 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 학술회의총서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 협동연구총서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Ⅰ)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 년 총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2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 기 타

2010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 (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22,0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화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Ⅲ)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Ⅲ):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Ⅳ)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Ⅳ):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4(E)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5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Study Series** 비매품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기 타

비매품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비유 · 편역 종합연구 2012-2

##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김규륜 · 조한범 · 이동휘 · 임수호 · 장형수 · 정영철 · 조성렬 · 황규성